

2026 공존과 성장의 **경남**
희망 Jump! 행복 Up!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변경)

2026. 03.



경상남도
GYEONGNAM

목 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변경비교 및 요약).....	1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변경).....	28
(목표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30
(목표 2) 친환경생태농업 기반 확대로 농업의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	41
(목표 3) 공공의료의 권역별 확대와 질 높은 공공돌봄 서비스 실현	53
(목표 4) 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현	65
(목표 5) 일상속 평등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사회 실현	74
(목표 6)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	84
(목표 7) 탈탄소 에너지자립 실현	95
(목표 8)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대안경제로 경남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생성 ..	106
(목표 9)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경영 실현	118
(목표10)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불평등 완화	129
(목표11)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공동체 실현 ..	138
(목표12) 생산유통소비의 전환으로 순환경제 사회 실현	149
(목표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50년 경남 탄소중립 실현	160
(목표14)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줌	168
(목표15)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의 권리 실현을 위해 힘씀	178
(목표16) 거버넌스 기반으로 조례와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187
(목표17) 민관숙의를 통해 시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평가를 지원 ..	194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변경 비교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1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중점 과제	1-1	기후재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단위 과제	1-1-1	일상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자연 재난과
	①	재난 취약지역 상시점검 횟수		
	②	재난안전네트워크 개최 횟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횟수	
	③	재난구호협력 관련 MOU 체결 건수		안전 정책과
	④	공무원 재난안전교육 진행 건수		
	1-1-2	기후재난으로부터의 일상회복 지원		자연 재난과
①	재난현장 인권피해 대응책 마련 여부			
중점 과제	1-2	기후위기시대 위기산업 종사자 전환지원		산업 인력과
단위 과제	1-2-1	기후위기 취약산업 노동자 지원		대학 협력과
	①	직업전환 재학습 지원 건수		
	1-2-2	직업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제공		산업 인력과
	①	전환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②	위기산업 실직자 재취업 수			
경남 목표	G2	친환경생태농업 기반 확대로 농업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인다		
중점 과제	2-1	경남형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 기반 구축		
단위 과제	2-1-1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 확대		스마트 농업과
	①	생태농업단지 조성 개소		
	②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농가(단체) 개소		
	2-1-2	도농상생 농산물 유통생태계 조성		농산물 유통과 스마트 농업과
	①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건수		
	②	도내 생산자 정보 표기 참여 농가 수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유기물 및 무농약) 인증 농가 수	
③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수			
중점 과제	2-2	경남형 신농업기후 적응사업		
단위 과제	2-2-1	기후위기 농어업인 안전망 확충		농업 정책과
	①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 수		
	②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③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2-2-2	경남형 신농업 기후 적응 사업		스마트 농업과 축산과
	①	신소득 과일생산시설 현대화 농가 수		
②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참여 농가 수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3	공공의료의 권역별 확대와 질 높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실현한다.		
중점 과제	3-1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단위 과제	3-1-1	경남형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보거 행정과, 의료 정책과
	①	권역 지역별 필수의료 자원 및 건강수준 조사 실적		
	②	공공의료원 설립 - '27년 설립	지표계획 변경: '29년 설립	보거 행정과
	3-1-2	일차보건의료체계 확립		
	①	일차보건의료 인력 재교육 인원		
	②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력 회의 건수 - 1회	지표계획 변경: 6회	의료 정책과
③	공공보건의료정책실무협업체 회의 개최 횟수			
중점 과제	3-2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실현		
단위 과제	3-2-1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모델 수립		통합 돌봄과
	①	총 이용자 중 중점관리 대상 서비스 이용률		
	②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건 수		
	3-2-2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확산		
	①	통합돌봄 사업 실시 시군수		
경남 목표	G4	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한다		
중점 과제	4-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점으로 지역교육 체계 재편		
단위 과제	4-1-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점으로 평생 교육체계 재편		교육 인재과
	①	ESD 평생교육서비스 컨설팅 횟수		
	②	ESD 프로그램 참여자 수		
	4-1-2	지역 평생학습 자원 연계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활성화 지원		
	①	ESD 유관기관 네트워크 수		
	②	성과공유회 개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중점 과제	4-2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 플랫폼 조성		지속협
단위 과제	4-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시민 배움터 운영 지원		
	①	시민배움터 운영 모임 수		
	4-2-2	지속가능발전 인재 양성		인재 개발원
	①	교과목 편성 교육과정 수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참여자 수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5	일상속 평등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한다		
중점 과제	5-1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여성 가족과
단위 과제	5-1-1	시군 성평등수준 개선 지원		
	①	성별영향평가 실효성제고 노력		
	②	시군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5-1-2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①	여성친화도시 지정(준비) 시군 수		
	②	성인지교육 이수인원		
중점 과제	5-2	여성경제활동 촉진		
단위 과제	5-2-1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①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취업률		
	②	경력단절여성 등 취·창업자 수		
	5-2-2	여성일자리 활성화지원		
	①	여성친화적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②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경남 목표	G6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의 음용률을 높인다		
중점 과제	6-1	안전한 식수를 위한 취수원다변화와 녹조예방을 위한 유역물관리 강화		수질 관리과
단위 과제	6-1-1	낙동강유역 수질총량관리 강화		
	①	총량계획 연차이행평가		
	②	창녕남지 수질(BOD)		
단위 과제	6-1-2	강변여과수 개발과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공급 확대		수 자원과
	①	취수원 다변화 추진율		
중점 과제	6-2	낙동강 재자연화 및 수생태계 복원과 보전으로 수질개선		수질관 리과
단위 과제	6-2-1	낙동강 본류의 하수처리율 제고		
	①	경상남도 하수도 보급률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 및 용량		
단위 과제	6-2-2	낙동강 보 및 하굿둑 수문개방 추진		수 자원과
	①	보 개방률		
	②	하굿둑 개방률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7	탈탄소 에너지자립을 실현한다		
중점 과제	7-1	탈탄소 에너지자립 지원		
단위 과제	7-1-1	유형별 맞춤형 에너지자립 선도모델 조성(도시 및 농산어촌형)		에너지 산업과
	①	에너지자립 컨설팅 횟수		
	②	에너지자립교육 및 캠페인 횟수		
	7-1-2	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①	경남 DR참여 가구 수			
중점 과제	7-2	농어업 에너지원의 전환 지원		
단위 과제	7-2-1	농업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스마트 농업과
	①	노후농기계 폐차지원건수		
	②	농업시설의 탈탄소 지원건수		
	7-2-2	어업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수산 지원과
①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건수			
②	어업시설의 탈탄소 지원건수			
경남 목표	G8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대안경제로 경남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중점 과제	8-1	경남 사회적 경제 지원범위 확대		
단위 과제	8-1-1	사회적경제 청년인재 양성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경제노동과
	①	사회적경제·청년인재 양성교육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②	청년 부흥 프로젝트 참여 기업 수	(삭제)	
	③	청년 대상 사회적 경제 관련 홍보 건 수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 건수	
	8-1-2	사회적경제 혁신 지원		
	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율		
②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고용 인원 수	사회적경제 고용 인원		
중점 과제	8-2	경남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 확충		
단위 과제	8-2-1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①	중간지원조직 설립 시군 수		
	②	금융지원 수혜 기업 수		
	8-2-2	위기 극복 상생 기반 조성		
	①	사회적경제 협업 활성화 지원건수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②	도내 광역단위 중간지원 조직 수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전환한다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한다	
중점 과제	9-1	저탄소신산업(탄소중립 선도산업) 생태계 지원		
단위 과제	9-1-1	RE100 기업지원		에너지 산업과
	①	RE100 컨설팅 지원 수		
	②	경남RE100협의회 운영 수		
	9-1-2	저탄소산단 전환 지원 사업		
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건수			
중점 과제	9-2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전환 지원		
단위 과제	9-2-1	경남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실현		산업 정책과
	①	지속가능경영 행정지원 건수		
	②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횟수		
	9-2-2	대기업-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상생협력		
	①	MOU 참여업체 및 기관 수	(삭제)	
②	대기업-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기술지원 건수(포럼세미나 개최건수)	ESG 확산 행사 개최 건수		
경남 목표	G10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불평등을 완화한다		
중점 과제	10-1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단위 과제	10-1-1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주택과
	①	주거수당 지원 청년 수		
	②	청년주택 공급 횟수		
	③		(신설) 취약계층 주거개선 건수	
	10-1-2	기후위기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		건축과
	①	노후 불량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건수		
②	빈집활용 건수			
중점 과제	10-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기본권리 보장		
단위 과제	10-2-1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확충		보육 정책과
	①	e아동행복지원 사업 수		
	②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확충 수		
	③	아동학대예방 홍보 활동 건수		
	10-2-2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사례관리 강화		
	①	정보연계협의체 운영횟수		
	②	상담원 1인 사례 관리 건수		
	③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가구수		
④	전담의료기관 운영 수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11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		
중점 과제	11-1	지역소멸 격차해소를 위한 이동권 보장 교통서비스		교통 정책과
단위 과제	11-1-1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기본권 보장		
	①	벽지 노선 총노선 길이		
	②	바우처택시 이용 횟수		
	11-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제도 도입		
	①	수요응답형(DRT) 노선 수		
②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인원			
중점 과제	11-2	지역소멸 대응 지역활력지원		도시 정책과
단위 과제	11-2-1	동네 생활 SOC 구축 확산		
	①	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②	현장지원센터 지원 건수		
	11-2-2	주민주도 커뮤니티 문화 조성 지원		
	①	주민참여 프로그램 횟수		
②	주민협의체 운영 횟수			
경남 목표	G12	생산·유통·소비의 전환으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한다		
중점 과제	12-1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환경 정책과
단위 과제	12-1-1	순환경제사회 촉진 사업 추진		
	①	자원순환 이행 성과평가 건수	순환경제 이행 성과평가 추진실적 제출건수	
	②	자원순환 시책 추진 건수		
	12-1-2	재활용 기반확충 및 수거체계 확립		
	①	자원화시설(바이오가스화 등) 사업 건수		
②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 '27년 0.188kg/인	지표계획 변경 : '27년 0.332kg/인		
중점 과제	12-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원순환 촉진		
단위 과제	12-2-1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제고		
	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참여 수		
	②	1회용품 규제 관련 참여형 계도 홍보 실적		
	③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시설 운영 건수		
	12-2-1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		
①	찾아가는 녹색소비 정보제공 실적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50년 경남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중점 과제	13-1	경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기후 대기과
단위 과제	13-1-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②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13-1-2	탄소중립 세부이행계획 추진 및 모니터링		
	①	탄소중립 추진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②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중점 과제	13-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및 기후대응기금 도입		
단위 과제	13-2-1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발간		
	13-2-2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①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 제정		
경남 목표	G14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준다		
중점 과제	14-1	해양쓰레기 관리 및 친환경어업 지원		해양 항만과
단위 과제	14-1-1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①	해안쓰레기 수거량 (재해쓰레기 제외)		
	②	침적쓰레기 수거면적		
	③	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 운영 횟수	(삭제)	
	④	어업폐기물 집하장 설치 개소수		
	⑤	바다자율정화 도민참여율 (공무원·어업인 제외 비율)		
14-1-2	낙시관리 기준 강화 및 친환경어업 지원		수산 자원과	
①	낙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등			
②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증가율			
③	친환경부표 보급률			
④	생분해성어구 보급률			
중점 과제	14-2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 항만과
단위 과제	14-2-1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		
	①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교육 및 홍보 건수		
	②	해양보호구역 주민교육 참여주민 수		
	14-2-2	해양보호구역 확대		
①	해양보호구역 지정 수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15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의 권리 실현을 위해 힘쓴다		
중점 과제	15-1	자연의 권리 실현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단위 과제	15-1-1	생물종 조사 및 보호		환경 정책과
	①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 개소수		
	②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15-1-2	시민참여 및 인식 확대		
	①	거버넌스 운영 횟수		
	②	시민환경과학자 모니터링 건수		
중점 과제	15-2	생물다양성 보호와 생태계 서비스 확대		
단위 과제	15-2-1	습지보전지역 관리 강화		환경 정책과 해양 항만과
	①	습지보전지역 지정 건수		
	15-2-2	생태계서비스 확대		환경 정책과
	①	생태계 서비스 인식증진교육 횟수		
경남 목표	G16	거버넌스 기반으로 행정계획과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중점 과제	16-1	행정계획과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내실화		
단위 과제	16-1-1	조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의무화		인구 정책 담당관
	①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건수		
	16-1-2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①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건수		
중점 과제	16-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혁신		
단위 과제	16-2-1	SDGs 관련 위원회 협력 활성화		인구 정책 담당관
	①	합동 연찬회 개최 건수	(삭제)	
	②	분야별 위원회간 간담회 개최 건수	(삭제)	
	16-2-2	SDGs 관련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①	지속가능성검토 가이드라인 제공 위원회 수	(삭제)	
	②	위원회 역량강화 지원 건수		

목표 및 과제		현행	수정	부서
경남 목표	G17	민관수익을 통해 시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평가를 지원한다		
중점 과제	17-1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인구 정책 담당관
단위 과제	17-1-1	경남도-시군간 상시 지속가능발전협력 체계 구축		
	①	지식플랫폼 이용자 수		
	②	간담회 참여 시군 수		
	17-1-2	마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확산 지원사업		
	①	지속가능발전 실천 마을 지정수		
중점 과제	17-2	지역사회 숙의공론을 통한 시군별 목표 수립 및 평가		
단위 과제	17-2-1	시군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지원		
	①	시군 교육 횟수		
	②	컨설팅 지원 횟수		
	17-2-2	지속가능발전 평가지원		
	①	보고서 발간 여부		
	②	시군 평가 정보제공 지원(건수)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변경) 요약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피해를 입은 인구 수(명) : 4(2021) → 1(2025) → 0(2030) → 0(2040)													
1.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G1. 기후위 기 취약계 층의 사회안전 망을 구축한 다	1. 기후재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상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② 기후재난 으로부터의 일상회복 지원 	자연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시군별 자연재난으 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피해를 입은 인구 수	재난 취약지역상시점검 횟수	1	1	1	1	1	자연재난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횟수	1	2	3	4	5			
						재난구호협력 관련 MOU체결 건수	-	1	1	1	1			
						2. 기후위기 시대 위기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후위기 취약산업 노동자 지원 ② 직업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제공 	공무원 재난안전교육 진행 건수	-	1	1	1	1	안전정책과, 인재개발원
								재난현장 인권피해 대응책 마련 여부	-	-	마련	-	-	자연재난과
								직업전환 재학습 지원 건수	400	400	400	400	400	대학협력과
								전환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325	325	325	325	325	산업인력과
위기산업 실직자 재취업 수	230	230	230	230	230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도농수입 격차(%) : 65.5(2021) → 70(2025) → 75(2030) → 80(2040)											
2.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G2. 친환경 생태농 업 기반 확대로 농업의 기후위 기 적응력 을 높인다	1. 경남형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 확대 ② 도농상생 농산물 유통생태계 조성 	도농 수입 격차(%)	시군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	생태농업단지 조성 개소	8	10	10	11	12	스마트 농업과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농가 개소	9	12	12	14	15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건수	2	1	1	1	1	농식품 유통과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유기물 및 무농약) 인증 농가 수	2,500	2,500	16,000	16,500	17,000	농식품 유통과 스마트 농업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수	11	12	13	14	14	농식품 유통과
		2. 경남농업 기후위기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후위기 농어업인 안전망 확충 ② 경남형 신농업기후적응사업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 수	247,000	247,000	247,000	247,000	247,000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배우처 지원 수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청년농업인 취업직불제 지원 수	60	60	60	60	60	
						신소득 과일 생산시설 현대화 (ha)	71	71	71	71	71	스마트 농업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참여 농가 수	300	300	300	300	300	스마트 농업과, 축산과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공공병원 병상비율: 10.3% (2020) → 12% (2025) → 15% (2030) → 20% (2040)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G3. 공공의료의 권역별 확대와 질 높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실현한다	1. 권역별 공공의료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남형 공공보건 의료기관 확충 ② 일차보건의료 체계 확립 	공공 병원 병상 비율 (%)	시군별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명)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자원 및 건강수준 조사 실적(건)	1	1	1	1	1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공공의료원 설립(건)	-	-	-	-	-	보건행정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력 건수	1	1	6	6	6	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실무협의체 회의 건수	2	2	2	2	2	의료정책과
						일차 보건의료 인력 재교육 인원(명)	180	190	195	195	195	보건행정과
		2.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모델 수립 ②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확산 			통합돌봄 사업 실시 시군 수	6	8	12	18	18	통합돌봄과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건 수	-	1	2	3	5	
						총이용자 중 중점관리 대상 서비스 이용률(%)	10	12	14	16	18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검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지속가능발전 인식도: 12.0% (2018 전국) → 25% (2025) → 60% (2030) → 80% (2040)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G4. 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한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점으로 지역교육체계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점으로 평생교육체계 재편 ② 지역 평생학습 자원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성화 지원 	지속가능발전인식도 (%)	시군별 평생학습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과정 비율(%)	ESD 평생교육서비스 컨설팅 횟수	5	5	5	5	5	교육인재과
						ESD 프로그램 참여자 수	30	30	30	30	30	
						ESD 유관기관 네트워크 수	7	7	7	7	7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횟수	-	1	1	1	1	
		2.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 플랫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온오프 시민 배움터 운영 지원 ② 지속가능발전인재 양성 			시민배움터 운영 모임 수	20	20	30	30	40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과목 편성 교육과정 수	20	20	20	20	20	인재개발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참여자 수	1,400	1,400	1,500	1,500	1,600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지역성평등지수: 하위권 (2020) → 중하위권 (2025) → 중상위권 (2030) → 상위권 (2040)											
5. 성평등 보장	G5. 일상속 평등문 화 확산으 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한 다	1.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군 성평등 수준 개선 지원 ②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역 성평등 지수 (등급)	시군별 성별영향 평가 개선계획 산출율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제고 노력 (정책 개선율)(도+시군)(%)	85	85	85	85	85	여성가족과
						시군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41.5	42.0	42.5	43.0	43.5	
						여성친화도시 지정(준비) 시군 수	9	10	11	12	13	
						성인지교육 이수인원(명)	8,350	8,750	8,750	8,750	8,750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취업률	50	51	52	53	54	
		2. 여성경제 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② 여성일자리 활성화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자 중 취창업자 수	14,500	14,600	14,700	14,800	14,900	
						여성친화적 창업교육프로그램 지원	3	3	3	3	3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6,195	6,250	6,300	6,350	6,400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수돗물 음용률: 44.4% (2021) → 60% (2025) → 90% (2030) → 95% (2040)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G6.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인다	1. 안전한 식수를 위한 취수원다변화와 유역물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낙동강유역 수질총량관리강화 ② 강변여과수 개발과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 공급 확대 	수돗물 음용률 (%)	시군별 하수처리율 (%)	총량계획 연차이행평가(건)	12	12	12	12	12	수질관리과
						창녕남지 수질(BOD) (등급기준)	1b	1b	1b	1a	1a	
						취수원 다변화 추진율(%)	10	13	15	18	20	수자원과
		2. 낙동강 수생태계 복원과 보전으로 수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낙동강 본류의 하수처리율 제고 ② 낙동강 보 및 하굿둑 수문 개방 추진 			경상남도 하수도 보급률(%)	92.4	92.6	92.8	93.0	93.6	수질관리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 및 용량 (개소 / m³/일)	14 / 1,628	14 / 1,628	14 / 1,628	14 / 1,628	14 / 1,628	
						보 개방율	60	60	60	60	60	수자원과
						하굿둑 개방율	10	12	12	12	12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검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재생에너지비율: 4.5% (2020) → 11.5% (2025) → 30% (2030) → 40% (2040)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G7. 탈탄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	1. 탈탄소 에너지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형별 맞춤형 에너지자립 선도모델 조성 ② 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재생 에너지 비율(%)	시군별 재생에너지 비율(%)	에너지자립 컨설팅 횟수	2	4	6	8	8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자립교육 및 캠페인 횟수	6	6	6	6	6			
						경남 DR 참여가구 수	4,000	5,000	6,000	7,000	7,000			
		2. 농어업 에너지원의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② 어업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재생 에너지 비율(%)	시군별 재생에너지 비율(%)	노후농기계 폐차지원건수	-	50 (시범)	100	100	100	스마트 농업과
								농업시설의 탈탄소 지원건수	-	50 (시범)	100	100	100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건수	-	2 (시범)	50	50	50	수산자원과 수산정책과
								어업시설의 탈탄소 지원건수	-	40	40	40	40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검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사회적경제기업 수(개): 1,624 (2023) → 1,800개 (2025) → 2,000개 (2030) → 2,500개 (2040)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G8.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경제로 경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1. 경남 사회적 경제 지원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② 사회적경제 혁신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개)	시군별 사회적기업 5년 생존율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교육	4	4	2	2	3	사회적경제 노동과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 건 수	1	2	2	2	2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입주율	70	80	90	100	100	
						사회적경제 고용 인원 수	-	1,780	2,100	2,150	2,200	
		2. 경남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② 위기 극복 상생 기반 조성 			중간지원조직 설립 시군 수	4	4	5	5	6	
						금융지원 수혜 기업 수	10	10	10	10	10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3	3	11	10	10	
						사회적경제기업 도내 광역단위 중간지원 조직 수	3	3	3	3	3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RE100 참여율(%) : 0(2020) → 5(2025) → 20(2030) → 50(2040)											
9.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확충	G9.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다	1. 저탄소신산업 (탄소중립 선도산업) 생태계 지원	① RE100 기업 지원 ② 저탄소산단 전환 지원 사업	RE100 참여율 (개)	시군별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수(개)	RE100 컨설팅 지원 수	5	5	10	10	10	에너지 산업과
						경남RE100협의회 운영 수	1	1	1	1	1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건수	2,000	2,000	2,000	2,000	2,000	인공지능 산업과
		지속가능경영 행정지원 건수	2			2	2	3	3	산업정책과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횟수	30			30	40	40	50			
		ESG 확산 행사 개최건수	2			2	2	2	2			
		2.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ESG) 전환 지원	① 경남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실현 ② 대기업-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ESG)상생협력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사회지원율(%) :77.9 (2022) → 80(2025) → 90(2030) → 100(2040)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G10.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불평등을 완화한다	1. 주거취약 계층 주거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② 기후위기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 	사회 지원율 (%)	시군별 사회지원율 (%)	주거수당 지원 청년 수	1,986	1,986	1,986	1,986	1,986	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가구 수	30	30	30	30	30	
						취약계층 주거개선 건수	-	-	1,600	1,600	1,600	
						노후 불량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건 수	30	30	30	30	30	건축과
						빈집활용 건수	100	100	100	100	100	
		e아동행복지원 사업 수	4	4	4	4	4	보육정책과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확충 개소수	15 (아 8, 7) 쉼터	16 (아 8, 8) 쉼터	16 (아 8, 8) 쉼터	16 (아 8, 8) 쉼터	16 (아 8, 8) 쉼터					
		아동학대예방 홍보 활동 건수	4	4	4	4	4					
		정보연계협의체 운영횟수	4 (교육1 회)	4 (교육1 회)	4 (교육1 회)	4 (교육1 회)	4 (교육1 회)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가구 수	80	90	95	100	100					
		상담원 1인 사례 관리 건수	32	28이하	28이하	28이하	28이하					
		전담의료기관 운영 수	11 (단1 시군10)	16 (단1 시군15)	19 (단1 시군18)	19 (단1 시군18)	19 (단1 시군18)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향후 10년간 정주의사율: 78% (2020) → 80% (2025) → 84% (2030) → 90% (2040)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G11.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	1. 지역소멸, 격차해소를 위한 이동권 보장 교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기본권 보장 ②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제도 도입 	향후 10년간 정주의사율(%)	시군별 향후 10년간 정주의사율(%)	벽지 노선 총노선 길이(km)	3,749	3,936	4,000	4,200	4,500	교통정책과	
						바우처택시 이용 횟수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수요응답형(DRT) 노선 수	30	36	40	40	40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인원	1,160,486	1,200,000	1,250,000	1,280,000	1,300,000		
			2. 지역소멸 대응 지역활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네 생활 SOC 구축 확산 ② 소멸대응기금 조성 및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16	17	17	17	17	도시정책과
							현장지원센터 인력 수	-	-	13	13	13	
							주민참여 프로그래 횟수	35	40	45	50	55	
							주민협의체 운영 횟수	50	57	64	71	78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생활계 순환이용률: 47.45% (2020) → 56.87% (2025) → 61.10% (2030) → 63.0% (2040)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G12. 생산·유통 소비의 전환으로 순환 경제사회 를 실현한다	1.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순환경제사회 촉진 사업 추 진 ② 재활용 기반 확충 및 수거체계 확 립 	자원 순환 이용률 (%)	시군별 자원순환 이용률(%)	순환경제 이행 성과평가 추진실적 제출건수	1	1	1	1	1	환경정책과
						자원순환 시책 추진 건수	4	4	4	5	6	
						자원화시설(바이오가 스화 등) 사업 건수	7	7	7	7	7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 수거량(폐건전지등)(k g/인)	0.180			0.182	0.330	0.331	0.332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참여 수	13			16	20	24	28			
		1회용품 규제관련 참여형 계도 홍보 실적	3			3	3	5	5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시설 운영 건수	5			5	6	6	7			
		찾아가는 녹색소비 정보 제공 실적	7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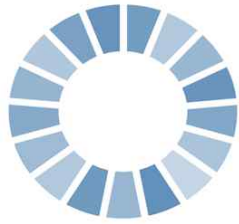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검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온실가스 배출량: 경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확정 예정											
13. 기후변화 대응	G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50년 경남탄소중립을 실현한다	1. 경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② 탄소중립 세부이행계획 추진 및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톤 CO ₂ eq)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톤 CO ₂ eq)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식)	-	1	-	-	-	기후대기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1	-	-	-	-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	-	-	1	1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회)	-	1	1	1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발간	1			1	1	1	1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 제정(여부)	-			-	검토	제정	-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시설 확충(개소): 126개소 (2020) → 164개소 (2025) → 213개소 (2030) → 341개소 (2040)											
14. 해양 생태계 보전	G14.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준다	1. 해양쓰레기 관리 및 친환경어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② 낚시관리 기준 강화 및 친환경어업 지원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시설 확충(개소)	시군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처리량(톤)	해양쓰레기 수거량 (자매쓰레기 제외) (천톤)	11.2	12.3	13.5	14.8	16.3	해양항만과
						침적쓰레기 수거면적(ha)	1,330	1,330	1,330	1,330	1,330	
						어업폐기물 집하장 설치 개소수	20	20	20	20	20	
						바다자율정화도민참여율 (공무원어업인 제외 비율)	60	65	70	75	85	
						낙시통제구역 확대 지정개소	30	32	32	32	32	수산자원과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증가율(% 누계)	22.9	24.5	30	30	30	수산정책과
						친환경부표 보급률% 누계	60	79	80	85	90	수산자원과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	50	50	50	50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교육 및 홍보건수	2	2	2	2	2	해양항만과				
		해양보호구역 주민교육 참여주민 수(백명)	-	50	50	50	50					
해양보호구역 지정 수	3	4	4	4	4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습지보호지역: 6개소 (2020) → 7개소 (2025) → 8개소 (2030) → 12개소 (2040)											
15. 육상 생태계 보전	G15. 자연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의 관리 실현을 위해 힘쓴다	1. 자연의 관리 실현을 위한 생물다양 성 보전과 회복	① 생물종 조사 및 보호 ② 시민참여 및 인식 확대	습지 보호 지역 (개소)	시군별 생태계 서비스 평가지표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 개소 수	1	-	1	-	-	환경정책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건수	1	0	0	0	0	
						시민환경과학자 모니터링 건수	2	4	4	4	4	
		거버넌스 운영 횟수	12			12	12	12	12			
		습지보전지역 지정 건수	7			7	7	7	7			
		생태계서비스 인식증진 교육 건수	5			10	15	20	25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수: 0 (2020) → 10개 (2025) → 25개 (2030) → 50개 (2040)											
16. 인권·정의·평화	G16. 거버넌스 기반으로 행정계획과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1. 행정계획과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내실화	①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②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대상 수(개)	시군별 지속가능발전지원 조례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건수	-	5	10	15	20	인구정책 담당관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건수	-	5	10	15	20	
						위원회 역량강화 지원 건수	1	1	1	1	1	
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혁신	① SDGs관련 위원회 협력 활성화 ② SDGs관련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UNSDGs	경남-SDGs (17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34개)	이행계획 단위사업 (68개)	핵심평가지표											담당 부서
				목표지표 (17개)	시군견인지표 (17개)	성과지표 (135개)	추진계획								
							'23	'24	'25	'26	'27				
목표값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도: 0 (2020) → 25% (2025) → 50% (2030) → 100% (2040)														
17. 파트너 십	G17. 민관속 의를 통해 시군의 지속가 능발전 목표 수립과 평가를 지원한 다	1.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남도-시군 간 상시 지속가능발 전협력체계 구축 ② 마을 지속가능발 전목표(SDG s) 실천 확산 지원사업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도 (%)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 및 평가 지원 예산(원)	지식플랫폼 이용자 수(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인구정책 담당관		
						간담회 참여 시군 수	18	18	18	18	18				
						지속가능발전 실천마 을 수	10	20	30	40	50				
						시군 교육 횟수	3	3	3	3	3				
		컨설팅 지원 횟수	3			3	3	3	3						
		보고서 발간 여부	-			-	1	-	1						
		시군 평가 정보제공 지원(건수)	2			2	2	2	2						



제7장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변경)

U N 목 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경 남 목 표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1	2025	2030	2040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부상자 수	4	1	0	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자 피해를 입은 인구 수(명)				

1-1 기후재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계절변화, 이상고온, 폭염, 한파, 가뭄, 폭우, 태풍, 산불, 미세먼지, 물 부족, 천연림 고갈, 농지 유실, 흉작, 기근, 농어업 유형 변화, 과실 주산지 및 어종 변화, 식량안보 위협, 신종감염병 대두, 경제 상황 악화 등 기후위기는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 인류의 최대 위기임
 -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위기로써 생명권, 생존권, 생계권, 건강권, 식량권, 물 권리, 주거권, 발전권,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도민 보호를 위한 재난재해구호, 긴급복지 지원, 건강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보건복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짐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은 개인·사회·집단·국가·세대마다 다르고 지역, 거주, 직업, 건강, 나이 등에 따라 영향의 강도는 달라짐. 사회경제적,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개인, 집단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개인적·지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특별히 취약한 인구집단으로서 특히 아동, 노인, 여성, 빈곤층, 장애인, 야외노동자, 농어민, 미래세대를 포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폭염·한파에 취약성을 보이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노후화주택 등 취약시설 거주자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2022)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위 ‘기후 재난’ 시기가 도래하였음. 재난재해로 인한 위기는 약한 고리를 강타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무너지게 만듦. 기후재난 상황들 속에서 안전관리, 구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함
- 2020년부터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 방역,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생존의 위기를 마주하게 한 복합재난임. 기후위기로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회복력(탄력성)’과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해졌고, 외부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패러다임이 중요해짐
 - 재난에서 ‘회복력(탄력성)’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각종 재난이 발생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환경·물리(시설/인프라)적 시스템이 받은 충격을 흡수하거나 적응하며 복구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뜻함
- 하지만 국내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의 한계는 재난 발생 이후 진행되는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물리적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어렵고, 물리적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이 부재함에 있음
 - 따라서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으로부터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하는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
- 2017-2021년간 경상남도의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자연재난)으로는 조류 피해가 연평균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사태 연평균 54건, 폭염 연평균 21건, 풍수해 연평균 6건 순으로 많았음. 특히 풍수해, 폭염, 대설, 한파, 지진 순으로 위험순위가 높았으며, 재산피해 규모로는 풍수해가 가장 컸음(2023년 경상남도안전관리 기본계획)
-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45년간 평균 기온은 1.6℃ 상승하였음(’74년 22.4℃ → ’20년 24℃). 경상남도의 최근 5년 평균 1만명당 온열질환자 발생률은 17개 시도중 5위이며, 특히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같은 기후취약계층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평균
경상남도	5.9	6.3	10.8	9.3	12.8	9.0

(출처: KEI, 2020 폭염영향 보고서)

- 또한 시설물이 밀집·대형화되고, 재난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재난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2020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경상남도의 재산피해는 3,970억원에 달함.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7-2021년 경상남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단위: 건/명)

자연재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풍수해	5	0	4	0	10	1	11	3	2	0	6	1
산사태	9	0	25	0	40	0	182	0	15	0	54	0
지진	5	0	1	0	5	0	2	0	7	0	4	0
조류	340	-	152	-	156	-	211	-	335	-	239	0
대설한파	3	1	6	0	1	1	1	1	3	0	3	1
폭염	24	0	37	3	15	1	12	0	16	1	21	3

출처: 2023 경상남도안전관리기본계획

2019-2021년 경상남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단위: 천원)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이재민	세대/명	222	397	318	621	153	265
건물피해	피해액	717,100		823,500		344,000	
공공시설	피해액	582,679		4,360,211		5,059,459	
사유시설	피해액	1,609,081		1,872,638		31,094	

출처: 2019-2021 재해연보 통계자료(국민재난안전포털)

-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빈곤층 전락·빈곤 위협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경상남도의 경우 지진, 산불, 홍수 등 자연재난 빈도는 늘고 있으나, 피해 당사자, 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한 회복 지원이 부재하여 빈곤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예방을 지원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 일상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미 기후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일상회복을 지원해야 함. 지역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물리적 복구만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공동체 회복과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분에서의 회복을 지원하는 접근이 요구됨

□ 추진전략

- 도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능 강화
-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확대

□ 추진계획

① 일상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 점검 및 예방 지원
- 도·시군별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 재난구호협력을 위한 공공-민간MOU 체결
- 공무원 재난안전교육 진행

② 기후재난으로부터의 일상회복 지원

- 재난현장 인권피해 모니터링 지원
- 재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재난 취약지역 상시점검 횟수	회	1	1	1	1	1	
경상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횟수	회	1	2	3	4	5	
재난구호협력 관련 MOU 체결 건수	건	-	1	1	1	1	
공무원 재난안전교육 진행 건수	건	-	1	1	1	1	
재난현장 인권피해 대응책 마련 여부	여부	-	-	마련	-	-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재난 취약지역 상시 점검																				
도·시군별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재난구호협력 위한 공공-민간MOU 체결																				
공무원 재난안전교육 진행																				
재난현장 인권피해 모니터링																				
재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0	7,700	7,700	7,700	7,700	
재난안전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국비	-	-	-	-	-	-	-	
	도비	-	2,700	2,700	2,700	2,700	2,700		
공무원 재난안전교육	국비	-	-	-	-	-	-	-	
	도비	-	5,000	5,000	5,000	5,000	5,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재난 유형별 주무부처 주무부서: 자연재난과 협업부서: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재난상황과, 인재개발원 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 경상남도 안전관리 기본계획 제3차 경상남도 기후후위기 적응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안전관리 기본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재난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 (사회)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환경) 기후재난으로 파괴된 생태계·환경 복원에 기여
- (거버넌스) 민관협력 대응 기능 강화로 재난 회복력 제고

작성자	자연재난과장 (☎211-2810) / 자연재난정책담당 (☎2812)
------------	---------------------------------------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연평균 폭염일수는 '80년대 8.2일, '90년대 10.8일, '00년대 10.4일에서 '10년대 15.5일로 증가했고, 지난 10년간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5도 오른 13도를 기록함
 - 폭염일수 증가로 직업군 간 온열질환 발생률 차이도 확대됨. 2018년 야외노동자 만 명당 28.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상남도 '18년 온열질환자 발생률과 '14~'18년 5년 평균 발생률 모두 전국에서 5번째로 높게 나타남

(단위: 만명)

시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평균
전라남도	8.1	9.7	14	11.5	17.3	12.1
전라북도	4.8	5.7	10.7	10.6	16.8	9.7
제주도	3.7	3.5	10.7	10.4	19.1	9.5
충청남도	7	8.4	10.1	8.8	13	9.5
경상남도	5.9	6.3	10.8	9.3	12.8	9.0

출처: 2020 폭염영향보고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경상남도는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을 받는 좌초위기산업(정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시멘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도민생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총 제조업 가운데 좌초위기산업 비중은 40%를 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30.6%임. 좌초위기산업의 붕괴와 고용축소는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전망
 - 경상남도 제조업 산업구조를 업종별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남은 조선, 자동차, 기계장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5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의 약 70%에 달함
 - 그러나 '20년 경남 제조업 생산은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등은 줄어 전년 동 분기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상남도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 생계에 위협을 당하는 좌초산업 노동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 대책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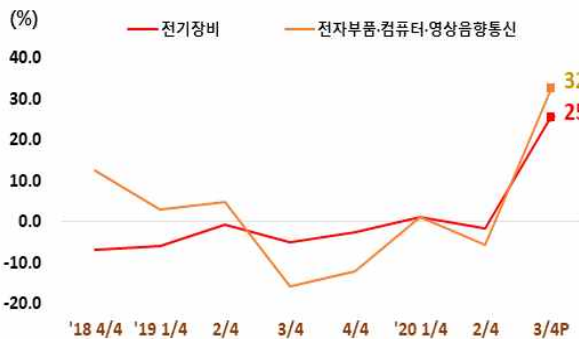
<경남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전년동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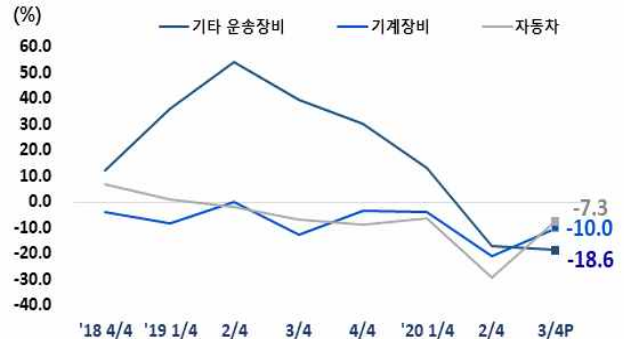
구분	2018 4/4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P
광공업생산	2.4	-1.2	3.9	-1.1	1.0	0.2	-15.3	-6.6
제조업	2.4	-0.5	5.3	-1.3	1.2	0.8	-16.3	-6.6
음료	-13.0	-15.2	-6.3	-10.4	-7.5	-3.7	4.0	7.1
섬유제품	-9.0	-4.8	12.0	-2.6	-0.7	-9.9	-6.5	9.5
1차 금속	2.1	-1.6	-2.8	-0.6	-3.0	2.7	-18.0	-13.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12.7	3.1	4.9	-15.7	-12.1	1.1	-5.5	32.6
전기장비	-6.7	-5.8	-0.7	-5.1	-2.6	1.1	-1.7	25.8
기계장비	-4.0	-8.2	-0.1	-12.8	-3.6	-3.9	-21.0	-10.0
자동차	6.7	1.2	-1.8	-7.0	-8.9	-6.5	-29.4	-7.3
기타 운송장비	12.0	35.9	54.2	39.6	30.2	13.3	-16.9	-18.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남 광공업 증가 업종 추이>



<경남 광공업 감소 업종 추이>



- 경상남도 '23년 1월 고용률 및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0.3%p 높게, 실업률은 0.3%p 낮게 나타남.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고용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부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의하면 산업별로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금융, 보건, 항공, 관광, 정유, 가스, 수송장비산업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로 물리적 위험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산업으로는 농림수산업, 보험, 보건, 관광산업 등으로 나타남
-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모두 요구함. 전 세계 및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감축의 영역임. 그러나 좌초위기산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삶을 돌보는 적응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경상남도는 위기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도민 경제와 삶의 질 회복을 모색해야 함.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탄력성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후가 변화하면서 석유, 화학, 철강, 시멘트 같은 산업은 수요가 줄고 공급 비용이 늘어나 좌초하거나 전환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임
 - 따라서 경상남도는 산업 재편으로 인한 실업 발생 문제 예방·해결을 위한 직업전환 재학습 지원체계를 마련, 일자리 매칭 및 직업전환교육을 추진하고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과정에서 열악한 노동과 돌봄으로 내몰리는 경남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추진전략

- 좌초위기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이직, 재교육 대책 마련
- 전환과정 중 산업 재편에 따른 고용시장 사회안전망 확충
- 직업전환교육 과정에서 소득수준 감소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육수요에 대한 맞춤형 교육

□ 추진계획

- ① 기후위기 취약산업 노동자 지원
- 직업전환 재학습 지원체계 마련
 - 관련 수요조사
 - 신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직업전환 재학습 지원
 - 온라인플랫폼 교육
 - 오프라인 실습 진행 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직업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제공

- 위기산업 구조조정 실직자 직업전환 교육 지원
- 위기산업 구조조정 실직자 재취업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직업전환 재학습 지원 건수	건	400	400	400	400	400	
전환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명	325	325	325	325	325	
위기산업 실직자 재취업 수	명	230	230	230	230	230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직업전환 재학습 지원체계 마련																				
직업전환 재학습 지원																				
위기산업 구조조정 실직자 직업전환 교육																				
위기산업 구조조정 실직자 재취업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4,625,000	4,900,000	4,900,000	4,900,000	
직업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제공	국비	4,250,000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도비	375,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주무부서: 산업인력과, 대학협력과 협업부서: 기후대기과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 에너지 기본계획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일자리종합대책 ▪ 경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지역산업육성사업 ▪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계획 ▪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좌초위기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으로 경제적 지지망 구축
- (사회) 기후위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정의 제고
- (환경)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기여
- (거버넌스) 기후위기 복지 관련 거버넌스로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

작성자	산업인력과장 (☎211-3360) / 산업인력정책담당 (☎3362) 대학협력과장 (☎211-4960) / 대학협력담당 (☎4962)
------------	--

U N 목 표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경 남 목 표	2. 친환경생태농업 기반 확대로 농업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인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1	2025	2030	2040
	도농수입격차	65.5%	70%	75%	8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2-1

경남형 친환경생태농업 전환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20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농촌이 주체가 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함. 프랑스는 법으로 농민의 에너지 생산활동을 농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일본은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과 공간을 고려해 재생가능에너지 계획을 마련했음
-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농업은 경상남도에서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인 탈탄소 전환 기반구축이 필요함. 기후재난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고 축산업 냉난방 비용은 올라가고 농업용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탄소중립을 향해 경상남도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
- 경상남도 농가수는 2022년 기준 119,585가구(11.6%), 농가인구는 244,049명(11.2%)로 가구수로는 전국에서 3번째, 인구수로는 4번째 규모임
 - 경상남도 경지면적은 꾸준히 감소 추세임('20년 141,889ha → '21년 138,185ha → '22년 136,294ha).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작물 재배가 많은 경남 경지이용률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전국 107.2%/경남 111.4%, 2022)을 유지하고 있음
- 농업구조 영세화, 농가인구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환경은 악화되고, 이러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이 절실함.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친환경생태농업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면서 생산함
 - 친환경생태농업은 장기적인 이익 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일작목 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의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 우리나라 연평균('16~'20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증감률은 유기인증이 18% 증가하였고, 무농약인증이 7.7% 증가함
- 정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1~'25)'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목표('20년 5.2% → '25년 10%)를 세운 결과, '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8만1827ha로 '18년 7만8544ha 대비 4.1% 증가함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경지면적의 3.8%(5,185ha/136,294ha) 규모임

<경남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현황>

(단위: 호, ha, 톤)

연 도	구 분	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2022년	농가수	4,784	1,762	3,022	폐지
	면 적	5,185.37	2,268.75	2,916.62	
	출하량	43,900.21	8,367.56	35,532.65	
2021년	농가수	5,035	1,881	3,154	
	면 적	5,296.18	2,224.86	3,071.32	
	출하량	46,323.05	9,305.52	37,017.53	
2020년	농가수	5,207	1,884	3,323	
	면 적	5,364.35	2,186.56	3,177.79	
	출하량	41,523.01	8,915.45	32,607.56	
2019년	농가수	4,933	1,693	3,240	
	면 적	4,968.05	1,904.87	3,063.18	
	출하량	39,030.35	8,709.99	30,320.36	

※ 작성기준일: 2023.08.14.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의 유기농인증 면적은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무농약인증 면적은 202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친환경농업 농가수의 경우 2020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임

- 경상남도는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 확충과 함께 산지 조직화 및 홍보 등 소비 확대 시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 감소 추세는 농촌 고령화와 유기농 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노동력 부족, 인증심사 강화 등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 급증에 기인함
- 따라서 경상남도는 불안정한 농업생산 환경 극복 및 친환경생태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모색해야 함
- 농촌은 주체나 공간 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음. 태양광, 풍력,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소형 열병합발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까지 결합하면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 수 있음
- 경상남도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온실가스 감축,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을 확장해 나가야 함
- 늘어나는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소비 촉진으로 도농상생 유통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 추진전략

- 경남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확대
- 학교급식 등 공공먹거리 공급 확대 연계
- 경상남도 제2차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연계

□ 추진계획

- ①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 확대
- 경남 생태농업단지 조성 확대
-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확대

② 도농상생 농산물 유통생태계 조성

○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 지원

○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확대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중소·고령농의 판로 기반 마련 및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생태농업단지 조성 개소	개소	8	10	10	11	12	스마트 농업과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농가(단체) 개소	개소	9	12	12	14	15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건수	수	2	1	1	1	1	농식품 유통과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유기물 및 무농약) 인증 농가 수	수	-	-	16,000	16,500	17,000	농식품 유통과 스마트 농업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수	수	11	12	13	14	14	농식품 유통과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생태농업단지 조성 확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 지원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6,218,000	2,800,000	2,800,000	2,850,000	950,000	
생태농업단지 조성	국비		-	-	-	-	-	친환경 농업과
	도비		210,000	210,000	210,000	230,000	250,000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 공·유통지원	국비		-	-	-	-	-	
	도비		100,000	140,000	140,000	170,000	200,000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국비		-	-	-	-	-	농식품 유통과
	도비		2,333,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도농상생 농산물 유통 생태계 조성	국비		2,75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도비		825,000	450,000	450,000	450,000	-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주무부서: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협업부서: 농업정책과, 농 업자원관리원 위원회: 먹거리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주요농 산물가격안정 운영심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푸드플랜 ▪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중) ▪ 제2차 농식품 기후 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역 푸드플랜 경상남도 먹거리 2030 혁신전략 ▪ 경남-부산광역시 푸드플랜(수립 중) ▪ 친환경농업육성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푸드플랜(거창, 김해, 진주, 거제, 통영)

□ 기대효과

- (경제) 중소농 소득 증대, 유통비용 감축, 일자리 창출, 도농상생
- (사회)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 (환경) 친환경 먹거리로 탄소발자국·에너지·푸드마일리지 감축
- (거버넌스) 친환경생태농업 및 푸드플랜 관련 거버넌스로 식량주권 안전망 구축

작성자	농식품유통과장 (☎211-6410) / 농식품정책담당 (☎6412), 먹거리지원파트 (☎6462)
	스마트농업과장 (☎211-6310) / 친환경농업파트 (☎6322)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IPCC AR6 제2,3 실무그룹 보고서, 2022 이상기후 보고서)
- 경상남도는 이상기후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기후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농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이상기후 지역 : 경상남도과 부산, 울산 지역은 연 기상가뭄 발생 일수가 249.5일로 전국에서 가뭄 발생이 가장 높은 지역임. 이상고온 관련해 창원시는 4월 최고기온, 통영시는 5월, 11월 최고기온, 양산시는 6월, 11월 최고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음. 건조 관련해 창원시와 통영시가 1~2월 강수량 0.0mm로 매우 건조했음. 한편 호우 관련해 양산시는 9월 1시간 60.6mm로 최다강수량을 기록했음(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후에너지환경부)
 - 경남 농가수는 전국 3위, 농가인구는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어가수는 전국 2위, 어가인구는 전국 2위 분포임(2022년 기준, 통계청)
- 이같은 이상기후는 우선 논·밭, 해안, 비닐하우스 등 폭염에 많이 노출되는 농어민의 건강을 위협함. 또한 농어업생태계를 교란 상태에 빠뜨려 생육 불량, 생산성 저하, 품질 저하, 주산지 변화, 병해충 발생 증가로 인한 2차적 문제 심화로 이어져 경남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2022년 경남 온열질환자 발생수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남
 - 냉해, 호우, 태풍, 가뭄, 저일조 현상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
 - 폭설, 이상저온, 우박, 일조 부족,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농산물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가격상승
 - 닭, 오리, 돼지 등 축산 폐사 피해
 - 고투입·고산출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화학비료 사용량, 가축분뇨 발생량 지속적 증가)

- 이렇듯 경남 농어업은 기후로 인한 수확량과 조업량 영향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건강 및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취약한 상황이지만 일부 사후 피해보상 및 현행 사후적인 보험으로는 한계가 있음. 기후 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부문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경상남도는 중장기적 관점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절실함
- 따라서 경상남도는 농어업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으로 농어업인 안전망 확충을 전면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농어민수당을 통한 이상기후 피해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비롯해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농어촌 소외 문제에 대응하는 안전망 필요
 -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고자 지자체가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소외된 고령농과 소농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음

전국 농어민수당 현황

지자체	사업명	시행시기	지급내용	지급대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21.5.)	2021	연 60만원	농업인(개인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20.3.)	2021	연 70만원	농임어가
충청북도	농어업인공익수당('20.9.)	2022	연 60만원	농임어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20.2.)	2020	45~80만원	농어업인(개인별)
전라북도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19.10.)	2020	연 60만원	농임가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19.10.)	2020	연 60만원	농임어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21.1.)	2022	연 60만원	농임어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20.6.)	2022	연 30만원	경영주, 공동경영주
제주도	농민수당('20.7.)	2022	월 40만원	농업인(개인별)

출처: 경남도민일보(2021.06.24.) · 한국경제(2020.02.05.) · 한겨레(2020.08.21., 2020.12.18.) 재구성

- 이상기후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재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광역·시군과 농협 등이 참여한 기금 운용으로 농어민 부담률 경감

과 대상 품목 확대 등 제고 필요

- '경남기후기금'을 통해 디지털·녹색 농어업 전환 농어민 지원 모색
- 경상남도는 50%를 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경상남도)'에 따라 경남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경영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특히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또한, 농업인 고령화 추세 개선을 위한 경남 청년농업인·귀농인 활성화 정책에 따라 청년창업농과 귀업농의 안정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 및 수준·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한편, 농업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위협 또는 기회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농업 기후적응 사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녹색농업 추진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12년부터 국가에서 추진 중) 참여 활성화를 강화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탄소농사 공공프로그램을 도입해 경남 농민들이 탄소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과감한 전환과 지원이 필요함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등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tCO₂)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임
- 농업인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인 참여를 위해 농업기술 보급과 관리 주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해야 함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 추진 계획('11.12)의 일환으로 '12년 시범사업을 시작, '14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농식품부고시제2014-18호,'14.3.14.)이 제정되어 제도 운영 근거를 확보, '14년부터 '농식품 국가인증 표지'를 인증 농산물에 표기하기 시작하였음
- 2023년도 저탄소 인증제 선정 결과 경상남도 농가 수는 총 372

개(상반기 276곳, 하반기 96곳)로 전체 선정 농가 수(4,079곳)의 9.1% 차지함(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3)

- 농업인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직불금 지불 및 사후 관리 등)을 마련해 참여 농가 확산을 모색해야 함

□ 추진전략

-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재해 최소화
- 농어업 현장의 기후위기 적응 속도를 높여 지속가능성 확보
-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상 등 재해대책 개편 및 강화
- 이해당사자 의견 적극 수렴과 주민주도를 위한 역량 강화

□ 추진계획

① 기후위기 농어업인 안전망 확충

- 농어업인수당 지급 추진
- 여성·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청년 취농직불제 지원

② 경남형 신농업기후적응사업

- 그린뉴딜 농업 분야 사업 발굴 확대 지원
 - 신소득 과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참여 활성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 수	명	247,000	247,000	247,000	247,000	247,000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명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명	60	60	60	60	60	
신소득 과일생산시설 현대화	ha	71	71	71	71	7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참여 농가수	수	300	300	300	300	300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농어업인수당 지급 추진																				
여성·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그린뉴딜 농업 분야 사업 발굴 확대 지원																				
농업·농촌 자발적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참여 활성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78,741,000	78,741,000	78,741,000	78,741,000	78,741,000	
기후위기 농어업인 안 전망 확충	국비	-	-	-	-	-	농어업인수당 여성농업인바우처 취농직불제
	도비	78,576,000	78,576,000	78,576,000	78,576,000	78,576,000	
경남형 신농업기후적 응사업	국비	-	-	-	-	-	
	도비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주무부서: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협업부서: 축산과, 농업자 원관리원,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농어업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탄소중립 추진 전략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제2차 농식품 기후 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중)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광역 지역 푸드플랜 경상남도 먹거리 2030 혁신전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 친환경농업육성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친환경농업육성시책 ▪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시책 ▪ 시군 청년농업인·귀농 지원시책

□ **기대효과**

- (경제)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농어민 소득안전망 확충, 그린뉴딜 연계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 (사회)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농어촌지역 소외문제 대응
- (환경) 저탄소농업 활성화로 에너지 전환 확대
-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민관산 속의 공론으로 사회적 수용력 제고

작성자	농업정책과장 (☎211-6210) / 농가인력경영파트 (☎6222), 여성청년농업인파트 (☎6232)
	스마트농업과장 (☎211-6310) / 스마트농업담당 (☎6312), 친환경농업파트 (☎6322)
	축산과장 (☎211-6510) / 친환경축산파트 (☎6532)

U N 목 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경 남 목 표	3. 공공의료의 권역별 확대와 질 높은 공공돌봄서비스를 실현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1	2025	2030	2040
	공공병원 병상비율	10.3%	12%	15%	2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3-1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교훈의 중요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가 4.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GRI, 2020).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 및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동력으로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공투자를 적극 투자해야 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함
-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수는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 10분의 1 수준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체 병상수 대비 10.3%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일본 26.4%, 미국 24.9%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음. 인구 천명당 공공병원 병상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국은 1.3개로 26개국 중 24위임
- 경상남도의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24년 기준 표준화사망률 평균이 10만명당 321.6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 주요사안인 암(신생물)으로 인한 표준화사망률 평균은 10만명당 88.8명,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표준화사망률 평균도 10만명당 29.3명으로 각각 전국 1위,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음 (통계청)
 - 경상남도의 기대수명은 '23년 기준 82.8세로 전국에서 5번째로 짧고, 가장 높은 서울(85세)에 비해 약 2세 짧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경상남도 시군별 건강수명이 가장 짧은 지역으로는 통영시(66.4세), 함양군(67.18세), 거제시(68세) 순이며, 이들 지역은 전국에서 건강수명 하위권에 속함

연도별 기대수명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대수명	전국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3.5
	경남	80.9	-	-	81.9	-	-	82.8	-	-	82.7

※ 사도별 생명표는 3년 주기로 작성. 출처: 2014년-2023년 생명표, 통계청

※ 기대수명 :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 건강수명 : 평균수명에서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동안을 제외한 기간

- 경상남도의 공공종합병원은 경상남도 마산의료원과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총 2곳이 유일하며(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3.8.16.) 의료자원들이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음
 - 18개 시군 중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5개 시 지역으로, 서부경남 지역(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8개 시군)은 진주시를 제외하고 종합병원이 전무함. 이는 양질의 이차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함
- 또한 경상남도는 의료취약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주요 의료취약지는 주로 서부경남에 밀집해 있음. 3대 응급질환(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인한 응급진료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음.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 정책 수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경상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1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 18.4%로 고령사회에 해당, '25년 이전 초고령사회 진입 예측
 - 의료취약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등록장애인 5.7%, 독거노인 23.9%, 치매유병률 10.59%(65세 이상, '20년 기준), 치매환자수 59,286명(65세 이상, '20년 기준), 외국인 주민 3.8%

- 보건 문제 해결 역량에 있어서도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으로 보건 분야 예산은 전국 하위권임. 총예산 중 보건 분야 예산 1.9%, 1인당 보건 분야 예산 3만7천원으로 전국 하위 4위임
 - 보건의료 인프라 불균형: 종합병원 25개소, 요양병원 139개소, 의원 3,279개소, 보건기관 416개소, 약국 1,239개소(서부경남 종합병원 및 병원수는 총 58개소로 경남전체의 17.9%), 공공의료기관 22개소, 6,735병상(서부경남은 경상대병원 유일)
 - 의료인력 부족: 인구천명당 의사수 2.27명(전국평균 2.74명), 응급의학전문의수 1.4명(전국평균 3.3명)으로 전국하위 3위,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응급의학전문의수 1.9명으로 전국하위 2위
 - 건강생활 인프라 부족: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소, 인지도 17.2%, 인구10만명당 체육시설수 101.3개소(전국평균 112.8개소)로 전국하위 4위, 지역보건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의 낮은 인지도 및 이용률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제한이 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4개 시군지역, 3대 중증응급환자의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률 41.9%로 전국하위 4위, 분만취약지 7개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4개 군지역, 외과 의료취약지 4개 군지역, 계층취약도와 지역취약도 모두 높은 지역 5개 군지역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 : '22년 기준 미충족의료율 9.1%(표준화율)로 전국 1위임
 - 낮은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50.3%로 전국 중하위권
 - 높은 관외 진료비: '17년 기준 1조2,618억원 관외 진료비 지출
- 지역건강지표가 점진적 개선 중이나, 고위험 사망 지표는 관리가 필요함
 - 건강생활실천율 개선: '25년 건강생활실천율(금연·걷기·절주)은 37.6%로 전년(35%) 대비 2.6% 상승했으며, 전국 중앙값(36.1%)보다 1.5% 높음. 체중조절, 구강관리 지표는 전국 중앙값과 비슷한 수준임(지역사회건강조사)
 - 높은 연령표준화 사망률: 321.6명 전국 5위, 심장질환사망률 29.3명 전국 4위, 악성신생물(암)사망률 88.8명(전국평균 79.7명), 폐렴

사망률 20.3명(전국평균 19.2명), 고의적자해사망률 24.5명(전국 평균 24.6명), 중증외상환자응급진료사망률 1.95% 전국 4위

- 도민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높은 요구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제7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도민 요구도 조사, 2018) : 응급의료 서비스, 분만 및 산부인과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불만족 등 의료취약지 거점 공공병원 확충 및 응급실 확대 등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경상남도의 낮은 건강수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과 자원 간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함
 - '20년 6월 개최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1차 도민토론회'에서도 부족한 의료 현실 극복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95.6%가 공공병원 신축을 지지했음.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20년 7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전달했음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있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년 말,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 공공병원에 병상 5,000개를 확충한다고 발표함.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할 계획임. 경상남도는 지역필수의료 확보 및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이 계획과 연계 모색이 필요함
- 또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일차의료는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대책 수립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므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를 강화해 양질의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색이 필요함

□ **추진전략**

-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 **추진계획**

- ① **경남형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자원 및 건강수준 조사
 - 권역별 공공의료원 확충방안 마련
 - 권역별 공공의료원 설립

- ② **일차보건의료체계 확립**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력 지원
 - 보건의료 지원조직 연계·협력
 - 일차보건의료 인력 재교육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자원 및 건강수준 조사 실적	건	1	1	1	1	1	
공공의료원 설립	개소	-	-	-	-	-	'29년 설립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력 건수	회	1	1	6	6	6	
공공보건의료정책실무협의체 회의 건수	회	2	2	2	2	2	
일차보건의료 인력 재교육 인원	명	180	190	195	195	195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자원 및 건강수준 조사																				
권역별 공공의료원 확충 방안 마련 및 설립 추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보건의료 지원조직 연계·협력																				
일차보건의료 인력 재교육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건강수준 조사	국비		684,793	684,793	684,793	684,747	684,747	
	도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경남형 공공보건의료기 관 확충	국비		-	11,092	21,962	38,330	24,051	
	도비		-	1,020	6,289	29,158	23,933	
일차보건의료인력 교육	국비		-	-	-	-	-	
	도비		-	10,000	10,000	10,000	1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협업부서: 감염병관리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원회: 경상남도 지역 응급의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공공보건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국가보건의료계획 제3차기후변화적응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건강증진업무계획 응급의료관련업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시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지역거점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재구성으로 의료비 및 행정비용 절감,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 (사회)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환경)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민관산 거버넌스 구축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211-4910) / 보건행정담당 (☎4912), 건강증진담당 (☎4922), 공공병원설립담당 (☎4942)
	의료정책과장 (☎211-5040) / 의료정책담당 (☎5042)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재난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건강, 생명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졌음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도 증가하고 있음(65세 이상 고령자 3대 사망원인: 암, 심장질환, 폐렴). 세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진 고령인구 비율은 44%, 장애 및 허약체질 노인도 17~18%임
-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남('20년 기준 40.4%, 2022 고령자 통계)
 - 고령인구의 건강 불평등 구조도 심각한 양상을 보여 소득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에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나이가 11.3년이나 차이가 나며,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1위 차지
 -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이 42%를 넘어 노인진료비 증가 속도도 빠름('09년 31.6% → '21년 42.3%).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함
- 경상남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5년에는 경남 총인구의 2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50년에는 4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좋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 모색이 절실한 때임

연도별 고령인구수 및 비중 예측

(단위: 만명, %)

65세 이상	2020	고령인구 비중	2025	고령인구 비중	2035	고령인구 비중	2045	고령인구 비중	2050	고령인구 비중
전국	815	15.7	1,059	20.6	1,529	30.1	1,834	37.4	1,900	40.1
경남	56	16.6	73	22.3	106	33.8	125	42.9	127	46.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

- 경상남도는 '18년 현재 노인이 아닌 도민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년 부양비는 4.8대 1이고, '45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함('통계로 보는 2018년 경상남도 노년의 삶', 동남지방 통계청)
 - 고령자의 자녀와 동거비율은 동거 2, 따로 8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따로 살고 싶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함. 따로 산다면 본인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음
-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여러 필요가 있지만 정작 본인이 살아오던 지역에서 이러한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기는 어려움
 - 기존의 여러 서비스는 대개 분절되어 있거나 연계 또는 통합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를 받아보려 해도 전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은 없음
 - 특히 빈곤 노인가구는 의료정보 접근성이 낮고 평소 건강관리가 되지 않은 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음
- 의료서비스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재활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함.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료는 치료 중심·전문가 중심으로 사후치료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은 방치되어 있음.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건강자치력 향상이 절실함
- 정부는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해 2025년까지 주거, 건강,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의 4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구축해 노인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상남도는 2019년 9월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 등 3개 읍면에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김해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였음
- - 커뮤니티케어 시범(선도)사업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유병

률이 높아지는 경남에서 돌봄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2023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은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대상 지역을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동 권역 또는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이용자 중 퇴원환자 등 통합돌봄이 필요한 중점 관리대상을 10%이상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3년 기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총 7 곳임. 향후 지역사회 돌봄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권역-시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종단적 경남 통합의료벨트에 생애주기별 다양한 민간기관·단체를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민간기관·단체를 지역 통합돌봄의 구성 주체로서 참여 유도
-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요양-돌봄-복지(예방)-의료(재활·치료)-주거-가족-안전 관계망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함
 - ①지역에 의료, 복지, 주거, 돌봄의 여러 요구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조사 선행 ②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통합돌봄 비전 수립 ③지방 정부는 기획, 재정의 세부계획 수립, 민간분야는 서비스 제공자 확보 및 교육, 지역 주민참여계획 수립 ④주거복지, 보건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 추진계획 수립 ⑤의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간호사, 주치의 등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⑥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작업/물리치료사 등 다직종 전문가 연계체계 구축 ⑦시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초기계획 수립-실행-평가 전 과정에 모든 시민이 조직적으로 결합하도록 해야 함

추진전략

-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
- 민관의 자원을 통해 시너지 발현, 통합 연계된 전달체계 확대
-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보장
- 18개 시군으로의 통합돌봄 체계 확산

추진계획

- ① 경남형 통합돌봄 모델 수립
 - 통합돌봄 사업 추진
 -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② 경남형 통합돌봄 확산
 - 통합돌봄 사업 참여 시군 확대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이용자 중 중점관리 대상 서비스 이용률	%	10	12	14	16	18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건 수	건수	-	1	2	3	5	
통합돌봄 사업 실시 시군수	수	6	8	12	18	18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통합돌봄 사업 추진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통합돌봄 참여 시군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450,000	1,200,000	1,800,000	2,700,000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국비	-	-	-	-	-	
	도비	450,000	1,200,000	1,800,000	2,700,000	2,70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통합돌봄과 협업부서: 경상남도사회 서비스원(경상남도통합 돌봄지원센터) 위원회: 경상남도 통합 지원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 커뮤니티케어로드맵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 공공보건시행계획 ▪ 보건의료발전계획 ▪ 국가보건의료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제4차 건강가정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지역사회보장 계획 ▪ 시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시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통합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 의료비 재정부담 완화
- (사회) 돌봄 당사자 인권과 삶의 질 상승, 지역주민 관계성 회복
- (환경)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돌봄으로 당사자의 생활환경 개선
- (거버넌스) 민관 통합연계를 통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

작성자	통합돌봄과장 (☎211-4470) / 통합돌봄운영담당 (☎4482)
------------	---------------------------------------

U N 목 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경 남 목 표	4. 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지속가능발전 인식도	12.0% (2018 전국)	25%	60%	8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평생학습과정 내 ESD 과정 비율				

4-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점으로 지역교육 체계 재편

□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역량을 기르는 교육임
-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10년 채택’(05~14년)을 선포하며 유네스코를 선도기관으로 지정, 이후 ESD를 위한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을 제시하며 40차 유네스코 총회(19.1)에서 GAP 종료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행체제로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for 2030)을 채택함
- 각 국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지역사회 내 교육과 연계하여 모든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구성해 가고 있음
 - 핀란드 및 스웨덴은 국가적 차원에서 ESD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하고 있음(정규교육 과정에 편입)
 - 이탈리아는 새로운 기후변화 의무 교과과정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 내용 포함
 - 미국은 환경교육 시행 학교 지원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환경교육 포함한 교육과정(California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을 정식 시행
 - 독일 연방 정부는 2년마다 ESD 현황 보고서를 보고받으며 교육체계의 중심을 전환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학교(Eco-School)를 설립함

- 정부는 제5차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기존 4차 계획을 통한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을 이어가며, ‘직업과의 연계 강화’ 및 ‘시대 변화의 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경상남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및 ‘환경 기본 조례’ 내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교육 체계를 마련하였고, 통영 RCE 및 창원 RCE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계 조정 및 사업을 수행, 선도적으로 ESD를 구축하며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를 추진
 - 경상남도에는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학교 네트워크 유네스코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S)로 40개교가 선정('26.1월 기준)돼 세계지식교육(GCE)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실천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 사업’ 안내 자료 제작 및 보급을 통해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으로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 지원
 - 통영시는 세계에서 8번째로 유엔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통영 RCE)로 지정됐고, 창원시도 세계에서 118번째로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창원 RCE)로 인증되며 ESD 촉진 및 확산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역할의 지역거점이 됨
 - 통영시 전 중학교는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시대를 대비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2020학년도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에 통영 관내 전 중학교에서 실시
 -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은 찾아가는 민관합동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교육(20.10) 등을 실시
- 경상남도 시군 중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이 16곳(미지정 시군 2곳)이며, 평생교육기관 2,355개(평생교육법령 181, 기타법령 2,174), 강사은행 등록 강사 543명, 등록공간 130개, 강좌 현황 15,532개(접수예정, 접수중, 접수마감 포함)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료, 2024.12.31.)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어 있음
 - 경남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5년 37.1%로 전국 평균(33.7%) 대비 3.4%p 높게 나타났음. 특히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참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

강좌 현황	%
성인문해교육	-
직업능력교육	23.2%
문화예술교육	13.9%
인문교양교육	1.3%
시민참여교육	0.3%
성인진로 개발역량 향상 교육	-
합계	37.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5)

- 경상남도는 ESD 관점으로 현재의 평생학습 체계를 재편하면서 시군에 전반적으로 ESD 관점의 지역교육을 확대하여 지속가능성의 토대 마련 필요
 - 지역 시민교육이 ESD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평생학습 및 학습조직의 프로그램을 ESD 관점으로 분석·평가·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존 평생학습 분야의 ESD 인식개선이 필요함
 - 타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ESD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활성화하고 이와 같은 경험을 전체 시군으로 확산 필요

□ 추진전략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서비스 분석·평가·개편
- ESD 관련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지역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한 ESD 활동 지원
-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추진계획

- 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점으로 평생교육체계 재편
- ESD 관점에서의 평생교육서비스 분석·평가·개편 컨설팅
 - 기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ESD 전환 컨설팅
 -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실무자의 ESD 개념 및 인식개선 교육
- ESD 관련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ESD 관련 평생교육 현황조사
- ESD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② 지역 평생학습 자원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성화 지원

○ 지역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한 ESD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

- 지역 문제해결과 연계한 ESD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속가능발전 마을활동(시민지식강사·마을리더양성 등)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 도,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발전 평생교육 박람회 개최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ESD 평생교육서비스 컨설팅 횟수	회	5	5	5	5	5	
ESD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명	30	30	30	30	30	
ESD 유관기관 네트워크 수	회	7	7	7	7	7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회	-	1	1	1	1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평생교육서비스 컨설팅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ESD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총예산액		92,000	179,000	198,000	198,000	198,000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점으로 평생교육체계 재편	국비	-	-	-	-	-	
	도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지역 평생학습 자원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성화 지원	국비	-	-	-	-	-	
	도비	44,000	131,000	150,000	150,000	15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교육부 주무부서: 교육인재과 협업부서: (재)경상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관련 부서 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지속가능발전 교육 세부시행 계획 시군 평생학습 세부시행 계획 시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 기대효과

- (경제) ESD 교육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인식 제고
- (사회) ESD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 전반 ESD 인식 확대
- (환경)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
- (거버넌스) 교육협력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

작성자	교육인재과장 (☎211-2460) / 평생교육담당(☎2482)
------------	------------------------------------

□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뜻하는 ESD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지구·국가·지역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임
- UN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기존 교육체계와 연계하여 각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받아들이고 삶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돕는 교육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평생학습도시(15곳 지정)의 확산과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평생교육 관련 교육기관, 강사은행, 학습동아리, 강좌 현황 등) 등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음
-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및 ‘환경 기본 조례’ 내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교육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음
- RCE(Regional Centre of Expertises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UN총회 산하 고등교육기관인 UN대학이 「UN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한 거점 도시로 국내에서는 경상남도 통영이 국내 첫 RCE도시이자, 세계 8번째 도시로 인증받음. 경상남도는 통영과 창원 두 곳이 RCE 도시로 지정되어있음. 전 세계 총 177개 RCE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총 7개 지역(통영, 인천, 울주, 인제, 창원, 도봉, 광명)이 지정되어있음(2023년 1월 기준)
- 2019년 3월 경상남도 교육청은 통영시를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특구로 지정하고, ESD 관점에서 초·중·고교 학교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공간 현황을 고려했을 때 오프라인 교육공간 인프라는 잘 구축돼 있는 반면에 비대면 교육공간의 조성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평생학습 종사자를 지원하는 체계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각 지역사회의 의제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주도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의제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수행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공간의 활성화와 종사자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도민참여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확대를 위해 온라인 배움터 공간을 조성하고, 온라인 배움터 참여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접근 격차를 해소하며, 오프라인 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과 도민학습 요구를 반영하는 ESD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SDGs 목표별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강사를 양성을 시군으로 확대하며,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야 함

□ 추진전략

- 지역사회 시민주도형 ESD 교육프로그램 조성
- 평생학습 관련 오프라인 교육공간 구축
- 디지털 접근 취약계층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
- 17개 목표별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양성 지원
- 경남인재개발원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① ESD 온오프 시민 배움터 운영 지원
- 도민 학습 요구 및 지역 특성 반영한 ESD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 도민 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역 동아리, 학습조직 등) 현황조사
 - ESD 시민 배움터 프로그램 전환 및 개설 지원
- 온·오프라인 교육공간 활성화
 - 온라인 교육공간 조성 및 공유 지원
 - 오프라인 교육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 디지털 접근 격차 해소 지원

② 지속가능발전 인재 양성

○ 교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및 체계화

- 기존 교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방안 마련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교과목 편성

○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무원 및 도민 교육

-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교육 실시
- 도민 및 단체 대상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시민배움터 운영 모임 수	개	20	20	30	30	40	
교과목 편성 교육과정 수	개	20	20	20	20	20	
지속가능발전 교육 참여자 수	명	1,400	1,400	1,500	1,500	1,600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ESD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온·오프라인 교육공간 활성화																				
디지털 접근 격차 해소 지원																				
교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및 체계화																				
ESD 공무원 및 도민 교육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08,000	108,000	216,000	125,000	142,000	
ESD 온오프 시민 배움터 운영 지원	국비			-	-	-	-	-	
	도비			18,000	18,000	25,000	25,000	32,000	
지속가능발전 인재 양성	국비			-	-	-	-	-	
	도비			90,000	90,000	100,000	100,000	11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기후부 주무부서: 정책기획관 협업부서: 환경정책과,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 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적자원개발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 제3차 환경교육종합 계획 ▪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 경상남도 환경교육 계획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 연간 교육훈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지속가능발전 교육 세부시행 계획 ▪ 시군 평생학습 세부시행 계획 ▪ 시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지역 내 선순환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공유 활성화
- (사회) 디지털 취약계층의 ESD 참여 증진
- (환경) 환경보전 인식 조성 및 확대
- (거버넌스) 시민주도 ESD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

작성자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254-2050) / 교육기획담당(☎2052)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761-0041)

U N 목 표	5. 성평등 보장				
경 남 목 표	5. 일상속 평등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1	2025	2030	2040
	지역성평등지수	하위권	중하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산출율				

5-1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남도는 1998년 전국 최초로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을 개설해 총 3,407명(2020년 기준)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하였음. 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양성평등주간’(9. 1.~9.7.)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으로 도 및 시군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범도민 양성평등교육과 그에 따른 표준강의안 개발 등의 노력을 함
- 경상남도 도정 최초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4대 목표 8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5년 동안 총 3,165억 원을 투입함.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설립 등 10대 중점과제와 범도민 양성평등교육 실시 등 3대 선도과제를 선정하였음
 - 2020년에는 지역 특성, 인구 변화, 주민 욕구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여성 관련 독립 연구기관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음
 - 2022년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도민의 정책요구 반영과 기관 방향성 확보를 위해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의 행정기능 통합을 통하여 여성가족정책 개발에 효율성 극대화 도모하였음
- 2023년 기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¹⁾로 지정받은 경상

1)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전국 101개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2023년 1월 기준).

남도 시군은 총 7곳으로(1단계 김해, 사천, 2단계 남해, 고성, 진주, 3단계 창원, 4단계 양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²⁾를 달성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지원함

- 경상남도는 민선8기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별도로, 경남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하여 경남도 자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 중임
- 경상남도는 2023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5대 방향('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2023 정책영역별 과제현황 및 추진예산

(금액 : 백만 원)

정책영역	합계	양성평등 노동환경 구축	돌봄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성인지적 건강권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과제건수	75	18	14	26	10	7
추진예산	181,242	4,378	154,864	18,324	3,496	180

출처 : 경상남도 2023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경상남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의사결정		문화정보		안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중하위권	60.9	14	65.6	15	23.8	13	83.9	13	78.1	5
2017	중하위권	63.3	13	67.4	15	28.9	12	81.3	15	72.6	7
2018	하위권	65.0	14	68.3	15	32.6	13	83.6	13	70.6	11
2019	하위권	66.4	15	69.9	15	35.0	12	87.2	10	74.8	10
2020	중하위권	68.2	10	70.5	14	39.6	9	85.9	11	77.8	8
2021	중하위권	69.1	11	71.1	14	41.4	9	86.1	7	77.4	10
2020년 대비 증감	동일	0.9	-1	0.6	0	1.8	0	0.2	4	-0.4	-2
2016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8.2	3	5.5	1	17.6	4	2.2	6	-0.7	-5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그러나 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성평등지수³⁾ 종합평가 결과 경상남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2020년부터는 중하위권으로 상향되어 현재까지(2021년 기준)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경상남도 성평등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점수가 낮은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2016년 대비 2021년 성평등한 사회참여 분야는 +8.2점, 여성 경제활동 분야는 +5.5점, 의사결정 분야는 +17.6점, 문화정보 분야는 +2.2점(지자체 중 최고폭) 개선됨. 그러나 2016년 대비 2021년 여성 안전 분야는 -0.7점으로, 순위에서도 5단계 하락하며 매우 악화된 상태를 보임
- 여성 안전 지표의 하락은 2023년도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 결과, 전국 단위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 과제는 최하 수준인 7등급으로 나타난 점과도 유사한 맥락을 보임
-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응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폭력 피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음
 - 2023년 기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광역이 5곳, 기초가 10곳임. 경상남도의 경우 해당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남 기초 시군의 경우 창원시 1곳에서 제정된 상황임
- 종합해보았을 때 전반적인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도민 전체의 성평등 의식 함양과 문화 확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특히 경상남도 여성 안전 분야 개선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를 위해 도내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성인지 교육 지원 및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함. 또한 장기적으로 여성의 행복 실태를 파악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 필요함

3)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개발됨. 지역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중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 지역 성평등지표 및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 확대' 계획을 근거로 2011년 첫 발표된 후 시도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종합지수로 작성되기 시작함. 2015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지표 구성은 2016년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확정된 이래 지표 구성의 변화는 없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추진전략

- 중하위권 영역과 낮은 성평등 수준 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
- 성평등 의식 함양과 문화 조성
- 시군 성평등수준 개선 지원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추진
- 여성 안전 분야 정책 강화

□ 추진계획

① 시군 성평등수준 개선 지원

- 시군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정책 개선 강화
 -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 시군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을 관리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대표성 향상
 - 시군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비율 관리
 - 여성 지도자 교육, 기업 양성평등교육 지원으로 민간부문 공감대 확산
- 경상남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②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 시군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쉼 단계 컨설팅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시군 특화사업 추진
-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붐 확산
 - 여성친화도시 정책 포럼 개최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지원
 - 여성친화도시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및 도민 성인지교육 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노력	%, 점	41%	85점	85	85	85	
시군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	41.5	42.0	42.5	43.0	43.5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시군 수	건	9	10	11	12	13	
성인지교육 이수인원	명	8,350	8,750	8,750	8,750	8,750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노력																				
시군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시군 수																				
성인지교육 이수인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468,100	520,000	570,000	620,000	670,000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국비		-	-	-	-	-	
	도비		415,000	465,000	515,000	565,000	615,000	
도민 성인지교육 실시	국비		-	-	-	-	-	
	도비		53,100	55,000	55,000	55,000	55,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주무부서: 여성가족과 협업부서: 전부서 위원회: 경상남도 양성 평등위원회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기본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 성별영향평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시행계획 ▪ 여성친화도시 활성 화 지원계획 ▪ 도민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시행계획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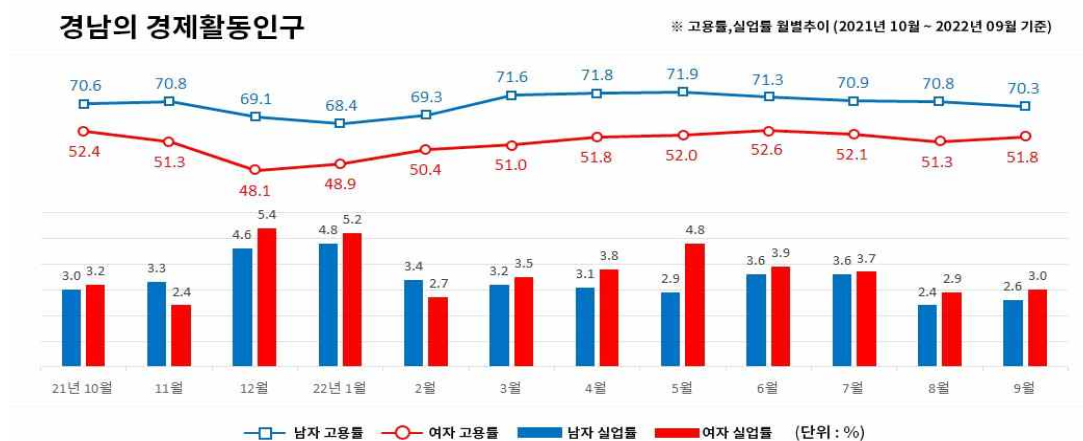
□ **기대효과**

- (경제) 여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 분야 지표 향상
- (사회) 지역 내 성평등 수준 제고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환경) 일상생활에 위협이 없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거버넌스) 주민주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작성자	여성가족과장 (☎211-5210) / 여성정책담당(☎5212), 여성일자리파트(☎5222)
------------	--

□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남도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취창업 지원, 노동권익 향상 등 일자리 전 분야에 걸쳐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음
-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경남도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경남을 떠나려는 이유로는 “구직, 취업,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이 50.7%로 가장 높았고, 경남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창업)하기 위해서”가 43.5%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이를 통해 경상남도의 성평등 및 지속가능한 정주조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 경상남도 여성고용률은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급락했으며, 여성 실업률 역시 급증하는 추세임. 2022년 연초 기준으로는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이 감소세이나, 남성에 비해 대부분의 시점에서 여성 실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검색일 2023.8.15.)

-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경상남도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했으나, 성별 고용률은 남성 70.6%, 여성 51.4%로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임. 이에 도는 2023 경상남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을 통해 여성고용률(15-64세)을 57.2%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6,195명), 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지원(20명)을 목표로 여성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2023 경상남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개소(도2, 창원2, 진주1, 김해2, 거제1, 양산1)와 도지정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창원2, 김해1)를 중심으로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창업 등을 지원한 결과 2019년 15,216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여성 취업지원기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있어 보다 활성화되도록 확대 필요
 - 특히, 성평등가족부의 2019년도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에서 경상남도는 3년 연속 도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센터별 평가에서도 5개 센터가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됨
 -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존에 지급하는 인턴 인센티브 60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하여 여성들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더욱 확대 필요함
-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2021년 여성 경제활동 분야 점수는 2016년 대비 5.5점, 2020년 대비 0.6점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경상남도 여성 경제활동 분야 순위는 전국 14위로 여전히 하위권 수준임.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기반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청년들의 일자리 및 취창업의 양질화 지원, 여성의 경력연결, 시니어 일자리 등을 산업변화와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전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 지역 사회적경제, 그린뉴딜 연계 일자리 창출
- 시군별 통합 여성일자리 정보제공 및 원스톱 취업 지원
- 취·창업 성공 여성 인센티브 확대

□ 추진계획

- ①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 경력이음 교육 지원
 - 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 경력이음 취·창업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그린뉴딜 연계 현장 견학, 멘토링
 - 재취업 및 전직 지원
- ② 여성일자리 활성화 지원
 -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추진
 - 여성 창업 교육 지원
 -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취업률	%	50	51	52	53	54	
경력단절여성 등 취·창업자 수	명	14,500	14,600	14,700	14,800	14,900	
여성친화적 창업교육프로그램 지원	개소	3	3	3	3	3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명	6,195	6,250	6,300	6,350	6,400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경력이음 교육 지원																				
경력이음 취·창업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추진																				
여성 창업 교육 지원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7,400,814	7,400,814	7,400,814	7,400,814	7,400,814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국비	4,692,163	4,692,163	4,692,163	4,692,163	4,692,163	
	도비	2,408,831	2,408,831	2,408,831	2,408,831	2,408,831	
여성일자리 활성화지원	국비	55,830	55,830	55,830	55,830	55,830	
	도비	243,990	243,990	243,990	243,990	243,99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주무부서: 여성가족과 협업부서: 복지정책과 산업인력과 위원회: 경상남도양성평등위원회, 경상남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일자리정책종합계획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단체 활성화 지원계획 일자리대책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시행계획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여성일자리 활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
- (사회) 여성의 빈곤 가속화 방지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환경)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관련 사업 및 일자리 연계
- (거버넌스) 지역사회 민관산학연 여성일자리 거버넌스로 협력 강화

작성자	여성가족과장 (☎211-5210) / 여성일자리파트(☎5222)
------------	-------------------------------------

U N 목 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경 남 목 표	6.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인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수돗물음용률	44.4%(2021)	60%	90%	95%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하수처리율				

6-1 안전한 식수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와 녹조예방을 위한 유역물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수도법」 제29조의 2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함. 경남도민의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은 44.4%임(기후에너지환경부,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 낙동강 수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는 식수공급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확보와 함께 물순환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 경상남도는 오염에 취약한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어 수질오염 사고 등에 대한 수돗물 수질 불안 요소를 지님
 - 지표수 중심의 직접취수는 원수의 수질, 각종 사고 등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취수원의 다변화가 필요
 - 물순환 건전성은 지역에서 필요한 물을 지역 내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적절히 처리하여 다시 지역의 하천으로 방류시킨다는 개념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5년간(2014~2018) 4대강 수계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낙동강 1857일, 금강 383일, 한강 339일, 영산강 0일로 낙동강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많은 상황임
- 2019년 기준 경상남도 취수장은 총 59개소(지방, 광역)이며 시설 용량은 총 2,206.4m³/일이며, 취수량 비율은 하천수 44.6%(표류수 39.1, 복류수 5.5), 댐 39.7%, 강변여과수 13.1%, 저수지 3.4%, 지하수 0.2%로 그중 낙동강이 51.9%(표류수 38.8%,

- 강변여과수 13.1%)를 차지
-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방안의 하나로 하천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식에서 지층의 자연여과 및 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간접취수방식인 강변여과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함안군 칠서면, 창원시 대산지역에 1일 10만 m^3 규모로 2005년 완료
 - 김해 생림지역은 2017년 완료하여 강변여과수를 취수 및 정수처리하여 수돗물을 공급
 - 의령 낙서지역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진행중
 - 경남도는 향후 2040년까지 먹는물 안전성과 물순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취수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간접여과수 개발을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강변여과수 개발과 함께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사회적 합의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취수원다변화가 새로운 댐을 짓는 대형 토목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먹는 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수돗물 생산 쉐과정 수질 모니터링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먹는물 안전성 강화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
 - 녹조 및 '22.7월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출사고 등 도민의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 여전함. 녹조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
 - 경상남도는 낙동강 녹조 예방 전담기구의 국가기관인 '국가 녹조센터' 설립 계획과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맑은 물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낙동강 유역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배출총량을 할당·관리하는 제도
 - 자연증감을 고려한 최종년도 예상 배출부하량에 개발 예정부하량을 더하여 총 오염부하량 산정
 -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수준의 할당부하량까지 삭감하는 총량계획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와 수질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량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음
 - 낙동강의 경우는 BOD 기준 60.8% 감축 성과

< 낙동강 오염물질 부하량 감축율 >

대상물질	수 계	배출부하량(kg/일)			감축율(%)		
		'02년(A)	'10년(B)	'15년(C)	1단계 (A-B)/A	2단계 (B-C)/B	1-2단계 (A-C)/A
BOD	낙동강	176,080	105,711	68,944	40.0	34.8	60.8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2020.7)

- 정부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계 일대의 각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강화된 목표수질 마련
 - 2030년까지 목표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과 총인(T-P, mg/L)임
 -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
 - 8개 지점 모두 총인(T-P) 기준값을 평균 22.5% 낮췄으며,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0.149mg/L에서 0.098mg/L로 34.2%를 낮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도경계 목표수질

[단위 : mg/L]

경남 시·도 경계 지점		오염물질	3단계 (~ '20)(A)	4단계('21~'30)		비교 (A vs B)
				최종(B)	등급	
대구-경남	낙본G(대구)	BOD	2.8	2.6	II	△7.1%
		T-P	0.075	0.056	II	△25.3%
경남-부산	낙본L(물금)	BOD	2.9	2.6	II	△10.3%
		T-P	0.065	0.049	II	△24.6%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2020.7)

- 목표수질 고시에 따라 경남도는 해당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관할 단위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이후 시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개발사업 환경대책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
- 경상남도는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하여 수질을 보전해해야 함
- 매년 이행평가를 통한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 할당부하량 초과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도간 원인 분석 및 합리적인 조치방안 수립
- 비점오염저감사업 최우선 집중투자를 반영하는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수계관리위원회, 수질관리협의회 등 낙동강 상·하류간 공동협력체계 강화 필요
- 경상남도는 장기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 지류까지도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한 맑은물의 공급 추진
- 강변여과수 중심의 식수공급을 추진
-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총량제 정착
- 낙동강유역관리에 대한 권한 강화

□ 추진계획

- ① 낙동강유역 수질총량관리 강화
 - 제4단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 녹조예방 등 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강화
 - 낙동강 지류총량관리제 대응

② 강변여과수 개발과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공급 확대

○ 강변여과수 개발 등 취수원다변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량계획 연차이행평가	건수	12	12	12	12	12	
창녕남지 수질(BOD)	등급 기준	1 b	1 b	1 b	1 a	1 a	
취수원 다변화 추진율	%	10	13	15	18	20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제4단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 계획 수립 시행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강변여과수 개발 등 취수원다변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세부과제	연도	기추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3,377	3,127	3,437	3,437	3,437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국비		2,266	2,256	2,215	2,215	2,215	
	도비		159	159	137	137	137	
	시군비		489	429	388	388	388	
	기타		463	283	697	697	697	
강변여과수 등 취수원 다변화	국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도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26년~2027년 예산은 2025년 예산 적용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기후부 주무부서: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질관리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낙동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상수도공급계획 ▪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기대효과**

- (경제) 환경친화적인 지역경제와 그린뉴딜경제의 확산
- (사회)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환경) 낙동강의 수생태계 보전
- (거버넌스) 민관산학의 협력으로 유역관리 강화

작성자	수질관리과장 (☎211-6710) / 수계관리담당 (☎6732)
	수자원과장 (☎211-6760) / 수자원관리담당 (☎6772)

□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12월 기준 경상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4.7%이지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조리 등에 사용하는 음용률은 낮음
 -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돗물을 ‘끓이거나 조리해서 마신다’는 비율은 42.2%이었으며, 그대로 마시는 경우는 7.2%에 불과
 - 경남 수돗물의 음용률은 43.5%이지만 직접 마시는 비율은 7.0%에 불과 (수돗물홍보협의회와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2017년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 가장 큰 이유는 잇따른 수질 오염 사태로 인한 불신이 커진 것이며, 물 산업 시장 확대, 정부의 수돗물 관리정책 미흡, 막연한 불안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힘
 - 낙동강의 경우는 낙동강 폐놀 유출 사고(1991년), 낙동강 정수장 악취 문제(1994년), 구미 정수장 물고기 폐사 사건(2012년), 구미 하수처리장 방류수 오염(2018년), 악화된 녹조 등 굵직한 오염사고와 수질 상태로 불신이 높아짐
- 낙동강은 경남지역의 식수와 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물자원이지만 각종 유역개발과 자연성 훼손, 적정처리의 미흡으로 수질기준 2급수(창녕남지 기준)를 유지하고 있음
- 낙동강 재자연화의 노력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낙동강유역의 4개보 개방을 시작으로 7개 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13개 분야 모니터링 (수질, 수생태, 육상생태,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취·양수), 경관, 어패류 규제, 하천시설, 농어업, 퇴적물, 구조물, 지류하천 등)
- 2017.6~2020.6까지 낙동강 수계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 물리적 환경: 체류시간은 감소(구미보 최대 79%↓, 합천창녕보

최대 74%↓)하고 유속은 대폭 증가(구미보 최대 235%↑, 합천 창녕보 최대 147%↑) 등 물 흐름 개선

- 수계 전체 모래톱 발생 2.865km²(축구장 면적 약 401배), 수변공간 9.315km²(축구장 면적 약 1,304배) 증가
 - 수질 분야: 개방 기간에 관측된 클로로필-a, BOD 농도의 예년 대비증감 경향은 시기별·보 별로 다소 상이, 반면 T-P는 대부분 감소
 - 생태계 분야: 개방폭이 컸던 하류 2개 보의 경우, 하중도, 모래톱 등이 형성되어 수변 서식공간 확대
 - 수생태계는 완전개방 시기가 매우 짧고 수위 변화가 적어 어류·저서동물의 건강성지수 및 지표의 변화가 미미함
 - 육상생태계는 보 개방 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흰꼬리수리, 흰목물떼새 등), 양서·파충류(표범장지뱀, 맹꽁이 등) 서식 확인, 중·대형 포유류 서식 확인
- 낙동강 하굿둑은 좌안배수문 510m(10문), 우안배수문 343m(5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굿둑 내측 하천수위가 외측 바다조위보다 0.2m 이상일 경우 수문을 개방하여 민물(담수)을 방류
- 하굿둑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상시 개방시 염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논란 존재
- 낙동강 하굿둑은 기수역 상실과 수중생태계 교란, 어도 단절, 어패류 감소, 철새 개체 수 급감, 강물 흐름 저하에 따른 녹조 발생, 하상 퇴적에 따른 오염도 증가 같은 피해를 초래
 - 수문을 열면 바닷물의 염분이 토양과 지하수에 스며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민
 - 낙동강하굿둑 ~ 창녕함안보 구간 취·양수장 총 81개소
- 이러한 논란 속에 수문개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9년~2020년까지 3차례의 단기개방 실증실험을 추진
- (1·2차 실험, 2019) 1시간 이내 1회 개방

- (3차 실험, 2020) 1~3시간 이내 12회 개방
- 수문을 장시간 개방하는 실증실험을 통해 낙동강 하구지역의 수생태계 영향을 분석하여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마련 필요
- 경상남도는 2018년 12월 기준 공공하수도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체 도민의 91%인 3,140천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0.5% 증가함
 - 시 지역은 94.6%, 농어촌(구 지역)은 70.1%로 시 지역과 농어촌 간 보급률의 차이가 있으나 취약지역인 농어촌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음
- 낙동강 본류로 흘러드는 낙동강유역 모든 시군의 하수처리율을 제고하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낙동강 재자연화를 통한 수생태계 복원과 보전으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여 수돗물의 음용률을 유럽 수준인 90%로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추진전략

-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개방 추진
- 낙동강 하굿둑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개방 검토
-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통한 수생태계 및 육상생태계의 복원
- 낙동강 유역 하수처리율 제고를 통한 오염부하량 저감

□ 추진계획

- ① 낙동강 본류의 하수처리율 제고
 - 경상남도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제고(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 농업부분 비점오염원 저감 교육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 ② 낙동강 보 및 하굿둑 수문개방 추진
 - 낙동강 보 상시개방 모니터링
 - 낙동강 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상시개방
 -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 모니터링
 - 낙동강 하굿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상시개방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경상남도 하수도 보급률	%	92.0	92.2	92.4	92.6	92.8	93.0	93.62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수 및 용량	개소, m³/일	14, 1,628	14, 1,628	14, 1,628	14, 1,628	14, 1,628	14, 1,628	14, 1,628	
보 개방률	%	60	60	60	60	60	60	60	
하굿둑 개방률	%	10	10	10	12	12	12	12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5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경상남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농업부분 비점오염원 저감																				
교육 및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확충																				
낙동강 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상시개방																				
낙동강 하굿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상시개방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74,719	174,719	174,719	174,719	174,719	
낙동강 본류의 하수처리울 제고*	국비	160,142	160,142	160,142	160,142	160,142	
	도비	14,577	14,577	14,577	14,577	14,577	
낙동강 보 및 하굿둑 수문개방 추진	국비	-	-	-	-	-	비예산
	도비	-	-	-	-	-	비예산

* 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기후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주무부서: 수자위과, 수질관리과 협업부서: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질관리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상수도공급계획 ▪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기대효과**

- (경제) 낙동강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제공
- (사회) 우리강을 살리는 공동체 책임의식의 함양
- (환경) 낙동강 유역의 환경 복원과 보전
- (거버넌스) 민관협력을 통한 낙동강 재자연화 추진

작성자	수자원과장 (☎211-6760) / 수자원관리담당 (☎6772)
	수질관리과장 (☎211-6710) /수질보전담당 (☎6722), 하수도담당 (☎6752)

U N 목 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경 남 목 표	7. 탈탄소 에너지자립을 실현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재생에너지비율	4.5% 20.6.기준	11.5%	30%	4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재생에너지비율				

7-1 탈탄소 에너지자립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남도 전력목표수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5년 전력목표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10.9%임(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 2020.2)

경상남도 전력목표수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GWh)

구분	2016	2017	2018	2023	2025
BAU 전력수요	34497	34,648	35,159	36,714	37384
전력목표수요	34497	34,648	35,159	34,051	33907
전력 감축량	-			2,664	3477
전력 감축비율	-			7.3%	9.3%
재생에너지 발전량	1920	1,679	1,655	2882	3690
재생에너지 발전량 (폐기물제외)	1874	1,638	1,615	2813	3601
폐기물 발전량*	46	41	40	69	89
전력목표수요 대비 비율 (폐기물제외) **	5.6% (5.4%)	4.8%(4.7%)	4.7% (4.6%)	8.5% (8.3%)	10.9% (10.6%)

* “재생에너지 발전량” 은 최근 개정된 신재생법(‘19년 10월 시행)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전량” 이 포함된 발전량과 제외된 발전량을 함께 병기하여 제시함

** “전력목표수요 대비 비율” 은 상기 주(*)에 따라 제시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9~2040)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를 목표로 2022년 10.5%를 설정하고 있으나 경남은 지역에너지계획에서 2025년에 10.9%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 경남은 담대하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총발전량 비중

의 30%까지 늘리고, 2040년까지 40%이상 확대하여 탈탄소 에너지자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탈탄소 지원을 통해 시군의 에너지자립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에너지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조례, 중소기업장의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민간영역의 에너지전환 근거를 마련
 -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청과 행정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하여 경남에너지센터를 설치하여 도민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외부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임
 -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시사점은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에너지자립 모델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의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655,492toe로서 이중 재생에너지는 654,997toe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는 494toe임
 -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에너지자립 마을에 적극적인 하동군이 경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6.8%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와 태양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하동군은 서울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과 MOU를 맺고 주민단체 차원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 하동군 다음으로 창원시가 폐기물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음
 - 신에너지는 모두 연료전지이며 이는 거창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창원과 진주에 분포하고 있음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2019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계(toe)

시군	생산량(toe)	공급비중	시군	생산량(toe)	공급비중
경남	655,492	100.0%	함안군	36,040	5.5%
창원시	108,009	16.5%	창녕군	19,613	3.0%
진주시	30,924	4.7%	고성군	47,098	7.2%
통영시	9,038	1.4%	남해군	12,626	1.9%
사천시	18,698	2.9%	하동군	110,015	16.8%
김해시	43,328	6.6%	산청군	18,847	2.9%
밀양시	16,497	2.5%	함양군	11,001	1.7%
거제시	13,962	2.1%	거창군	28,531	4.4%
양산시	51,546	7.9%	합천군	49,183	7.5%
의령군	25,506	3.9%	기타	5,030	0.8%

출처: 2019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0년 공표), 한국에너지공단

- 경상남도에서 시군의 탈탄소 에너지자립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 농촌 등 시군별 유형에 맞는 시범모델을 조성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시군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 경남의 도시형, 농산촌형, 어촌형 등 각 유형에 맞는 선도모델을 연구하고, 이 유형에 따라 시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도민이 참여하는 절약, 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화, 에너지 생산기술을 통한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는 타 지역의 에너지자립 마을 선례에서 시사점을 고려하여 추진필요
 - 교육 등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책임의식을 고양
 - 주민들 스스로 에너지자립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설치비 일부를 최소 3년 이상 지원
 - 주민인식 개선 없는 단순한 설비 중심의 투자는 지양
 - 공동체 중심의 에너지자립 마을 추진이 되도록 지원
- 신재생에너지 생산 부문도 중요한데, 도민참여를 통해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남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2019년 기준 65만toe에서 1단계로 화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00만toe 생산을 이뤄내고, 2단계에서 원전 1기에 해당하는 200만toe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

- 에너지자립 추진 시 지역과 공간에 절약, 효율화, 생산이 모두 집약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

□ 추진전략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직 정비 및 확대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정비
- 주민인식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 도민의 삶을 변화를 통해 절약, 효율화, 생산으로 자립을 제고
- 시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모델
- 주민주도형 사후관리 모델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에너지자립의 지속적 지원

□ 추진계획

- ① 유형별 맞춤형 에너지자립 선도모델 조성
(도시 및 농산어촌형)
 - 도시·농·산·어촌형 에너지자립 모델 연구
 - 도시·농·산·어촌형 모델 정립 및 컨설팅
 - 공모를 통한 유형별 참여 시군 선정 및 사업지원(매칭)
 - 에너지자립교육 및 캠페인, 에너지자립공동체 실천
 - 도시·농·산·어촌형 에너지자립(전환) 리빙랩 운영
 -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 ② 에너지자립 기반마련
 - 에너지자립 지원제도 개선
 - 에너지조례 제·개정
 - 시군별 에너지자립 모델 지원
 - 시군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자립(전환)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에너지자립 컨설팅 횟수	회	-	-	2	4	6	8	8	
에너지자립교육 및 캠페인 횟수	회	-	-	6	6	6	6	6	
경남 DR 참여가구 수	가구	-	-	4,000	5,000	6,000	7,000	7,000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도산농산어촌형 에너지자립 모델 연구																				
공모를 통한 유형별 참여 시군 선정 및 사업지원																				
에너지 자립 지원 제도 개선																				
시군 에너지자립 모델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세부과제	총예산액	0	40,000	100,000	200,000	200,000	
시군 유형별 맞춤형 에너지자립 선도모델 조성	국비	0	-	-	-	-	에너지자립모델 연구 이후 산출 가능
	도비	0	40,000 (용역비)	100,000	200,000	200,000	
시군 에너지자립 기반마련	국비	0	-	-	-	-	비예산
	도비	0	-	-	-	-	비예산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기후부 주무부서: 에너지산업과 위원회: 에너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지역 내 탄소경제에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경제 구축
- (사회) 지역공동체 중심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소외계층 포용
- (환경) 에너지 자립의 실현으로 생태환경보전
- (거버넌스)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자립률 제고

작성자

에너지산업과장 (☎211-2250) / 에너지정책파트 (☎2252), 신재생에너지파트(☎2282)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농축산부문은 2030년까지 26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2019년 기준 감축목표 달성률은 64.3% 수준에 그침
-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농업과 어업은 경상남도 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않기 때문에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차 산업	전국	30,740,963	31,535,409	31,598,412	32,203,471	33,229,204	32,366,342	33,981,048	34,583,625
	경남	3,405,429	3,393,996	3,424,282	3,490,460	3,569,027	3,494,042	3,725,327	4,149,132

경남내 산업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차(%)	3.9	3.7	3.7	3.7	3.6	3.5	3.7	3.8
2차(%)	53.5	53.0	51.6	50.3	50.3	50.1	48.4	43.6
3차(%)	42.6	43.3	44.6	46.0	46.1	46.4	47.9	52.6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당해년가격, 백만원), 각년도
주석: 1차 산업(농림어업), 2차 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3차 산업(그 외)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화물선과 어선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음(2018)
 - 모두 탄소 중심의 에너지원을 쓰고 있어서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높은 수준이어서 동력 에너지원의 전환이 필요
- 경상남도의 농업기계보유 현황은 2024년 기준 250,694대로 이중 동력경운기가 68,248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관리기 59,696대, 농용트랙터 38,799대 등임
 - 전국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442,357대), 전라남도(281,233대) 다음으로 많은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음

경남 합계	동력 경운기	농용 트랙터	스피드 스포레이어	동력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기타
250,694	68,248	38,799	4,679	21,086	59,696	9,828	9,771	32,385	1,620	298	1,317	2,967

출처: 국가데이터처 농업기계보유현황, 2024

- 경상남도 어선 현황은 2019년 13,850척으로 전남 27,413척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안어업 어선이 10,638척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근해어업 720척, 천해양식 어선이 1,918척

단위(척)	총 계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천해양식	내수면어업	기타어업
전국	65,835	211	2,677	37,785	19,347	3,067	2,748
경남	13,850	1	720	10,638	1,918	400	173

출처: 해양수산 통계시스템, 2021

- 2026년 정부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농촌 미세먼지 저감과 탈탄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 투입
 - 농가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의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중고거래가 기준으로 대당 평균 370만원을 조기폐차 지원 전망
- 농업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도 공기열·지열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에 5,200백만원, 다점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 3,668백만원의 예산 투입
- 2008년부터 국·도비를 투입, 선박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엔진교체 등 에너지 절감장치를 보급하고 있으며 2021년 국·도비 1,864백만원 예산 투입
 - 실질적인 어업 분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운영 중인 관공선(37척)과 대형어선부터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어업분야 탈탄소화 선도 필요
-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는 양식·종자생산어가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인버터)을 보급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를 362대 보급하고 있으며, 2021년 4,840백만원 예산 투입
- 따라서 경상남도는 농업과 어업 분야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곳이고, 농기계와 어선 등 탄소에 의존하는 1차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함

- 경남은 연근해어업이 대부분이어서 전기추진동력을 도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함

□ 추진전략

- 농어업 동력원의 전환 지원
- 농어업 기계의 탈탄소화
- 농어업 시설의 탈탄소화
- 주민주도와 자치역량 강화

□ 추진계획

① 농업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지원

- 노후 농기계의 폐차지원 및 전기농기계 전환
- 농업생산시설의 탈탄소 지원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산물 재배 및 창고 전환 등
 - 에너지 다소비형 시설의 전환

② 어업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지원

- 어선 동력원의 탈탄소 전환
 - 하이브리드 및 전기추진 선박 보급 등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 어업시설의 탈탄소 지원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노후농기계 폐차지원건수	건	-	-	-	50 (시범)	100	100	100	
농업시설의 탈탄소 지원건수	건	-	-	-	50 (시범)	100	100	100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건수	건	-	-	-	2 (시범)	50	50	50	관공선 및 근해어선
어업시설의 탈탄소 지원건수	건	-	-	-	40	40	40	40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노후 농기계의 폐차지원 및 전기 농기계 전환																				
농업시설의 탈탄소 지원																				
어선 통력원의 탈탄소 전환																				
어업시설의 탈탄소 지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72,571.6	118,505.6	118,543.6	120,090.6	120,090.6	
농업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지원	국비	1,940	2,276	2,306	3,688	3,688	
	도비	573	671	679	844	844	
어업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지원	국비	54,338	89,338	89,338	89,338	89,338	
	도비	15,720.6	26,220.6	26,220.6	26,220.6	26,220.6	

※ 2025년~2027년 예산은 2024년 예산 적용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주무부서: 스마트농업과, 수산자원과 협업부서: 위원회: 에너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지역에너지계획 경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 기대효과

- (경제) 탄소집약 1차산업을 탈탄소 경제로 전환
- (사회) 기후위기산업의 전환지원으로 사회 정의 제고
- (환경) 동력에너지의 전환으로 지역 환경보전 기여
-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로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작성자	스마트농업과장 (☎211-6310) / 스마트농업담당(☎6312), 식량산업과트장 (☎6332)
	수산자원과장 (☎211-5260) / 어업관리담당 (☎5272)

U N 목 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경 남 목 표	8.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대안경제로 경남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3	2025	2030	2040
	사회적경제기업 수	1,624	1,800	2,000	2,50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사회적경제 5년 생존율				

8-1 **경남 사회적경제 지원범위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은 기존의 생활양식과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과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드러나게 했고, 생태주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음. 지속가능한 삶으로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내재화를 위한 사회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경상남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경제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며 경남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함.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
 - 경제 불평등, 고용불안,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저고용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과 빈곤 등 사회경제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볼 수 있음
 -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기

존 사회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함

- 조직 형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함
- 사회적경제를 통해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호, 전환학습과 교육, 재난 대비, 돌봄, 건강과 의료, 예술과 놀이, 여행, 문화, 먹거리 등이 있음
-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임. 이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됨
- 정부는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기술 기반의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주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해왔음
-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남도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 경상남도도 지역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
- 대표적으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함. 또한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 거점이자, 통합지원체계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3월 창원시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개소함
 - 혁신타운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남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자생적 핵심 거점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의 추진 노력으로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꾸준히 증가해왔음. 특히 2023년 대비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09개로 8% 이상 증가함. '24년 말 기준 경남의 사회적기업 인증 수는 경기, 서울, 경북, 강원, 전남에

서 7번째로 많은 규모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25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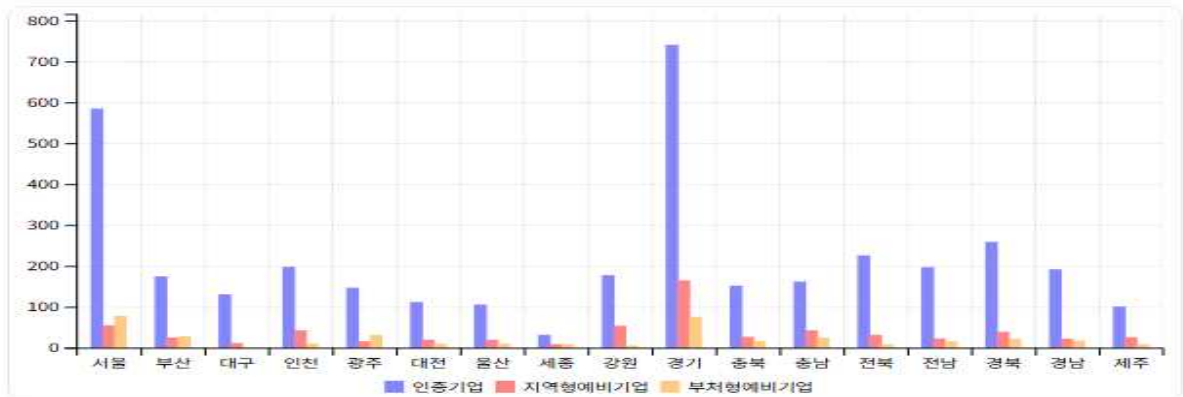
(단위: 개)

	연도	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계	예비	인증	소계	일반	사회적		
경남	2025	2,009	248	54	194	1,586	1,135	451	114	61
	2024	1,894	284	83	201	1,431	1,051	380	121	58
	2023	1,855	348	143	205	1,322	988	334	127	58

출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지역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2024년 12월말 기준)

지역별 사회적기업 통계



출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중심 전문 인력 양성 및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촉진 기반을 조성해 경남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경상남도 내 경력단절 여성, 노인, 좌초위기산업으로 직업전환이 필요한 신중년 등의 재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 반영할 수 있음
 - '경남-SDGs 2040'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을 발굴해볼 수 있음. 예를들어 기후위기 취약산업 노동자 전환, 경남형 친환경생태 농업,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 경력이음 취·창업, 에너지자립, 저탄소산업,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주민주도 커뮤니티, 자원순환, 해양보호, 생물썩공 캠페인, 습지보전, 그린뉴딜, 지속가능발전마을 관련 등

□ 추진전략

-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속해 지역경제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
-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사회적경제 구조 진입 지원
- 사회적경제 혁신을 위한 지원 활성화

□ 추진계획

①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종사 청년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사회적경제 종사 청년 모임 활성화
 -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

② 사회적경제 혁신 지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지원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등 지원
 - 사회적경제 근로 환경 개선 지원

○ 사회적경제 고용 지원

- 사회적경제 고용 관련 정보 관리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교육	회	4	4	2	2	2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 건 수	회	1	2	2	2	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율	%	70	80	90	100	100	
사회적경제 고용 인원 수	명	-	1,780	2,100	2,150	2,200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진행																				
사회적경제 종사 청년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고용 지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사회적경제 청년인재 양성	국비	-	-	-	-	-	
	도비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	국비	-	-	-	-	-	
	도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p>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p> <p>주무부서: 사회경제노동과</p> <p>협업부서: 산업인력과, 여성가족과, 청년정책과</p> <p>위원회: 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 2050탄소중립 추진 전략(관계부처합동)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 공유경제추진계획 ▪ 사회적기업지원계획 ▪ 청년일자리주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지속발전 가능한 기술기반 청년 기업 육성으로 지역 대안 경제를 넘어 국가 주류경제로 확장
- (사회) 취약계층 고용 창출 등 소득 양극화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공동체 복원 및 사회적 가치 공감대 확산
- (환경) 저탄소 대안경제 구축으로 탈탄소사회로 전환
- (거버넌스) 민관협력 기반구축으로 상생협력 정착

작성자	사회경제노동과장 (☎211-3450) / 사회적기업파트장 (☎3482), 사회경제혁신타운파트장 (☎3492)
------------	--

□ 배경 및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생태환경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친환경 전환은 장기적 성장에 부합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고 봤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린투자는 수많은 고용 창출을 이끌어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했음
- 사회적경제가 앤데믹 시기로 진입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중간지원 전달체계를 강화하며, 부처별 분산된 사업을 통합해 규모를 키워야 하며 민간위탁제도 및 입찰제도도 개선해야 함
-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큰 타격을 입었음.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와 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시민이 사회적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
 - '20년 12월 '경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https://gnpp.or.kr)이 정식 오픈함. 도내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상호 간 비대칭 정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임
 - 경상남도는 2023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소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입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활성화와 홍보를 추진할 예정임
- 특히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사회적경제 주체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회복력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할 수 있

음.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업 프로젝트를 구축하거나 지원을 모색하는 것 또한 추진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간 상생협력 사례들을 홍보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가 경남 골목상권의 생산·판매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라는 안전망을 통해 외부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활용
- 경상남도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대출금에 대하여 연이자 2.5%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총 대출규모 40억원/ 최대 3.4% 금리감면 혜택)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도전과 실천이 자원과 역량의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도의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가장 먼저 ‘경남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모색해야 함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 사회적경제기업,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인적 네트워크 촉진, 정보와 기술의 중개와 제공, 주민 역량교육, 실무적 운영지원 역할을 수행함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운영형태	운영주체
중앙정부 차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위탁형	모두의 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광역 차원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위탁→민간위탁 (2020)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형	경남대학교마을공동체지원단 경남광역자활센터
기초 차원	기초 단위 중간지원조직	위탁형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창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시군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면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통합마케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강화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생활경제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희망 시군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시군에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신규 설립하거나 또는 ②기존 공동체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③전담 직원을 채용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역량을 끌어올린 후 조직을 설립 하는 등 다양한 기반 마련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다음으로 지역문제해결형 R&D 활성화를 통해 '경남 모들 LAB'과 같은 리빙랩의 지역 기반 실험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망을 구축해야 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모두의 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성장 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경남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권역별 지원기관, 마을기업지원센터 등을 연결해 시군 지역경제 특성과 주민 정책 수요, 서비스 현황 등을 공공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 공공구매,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기업과 도민 참여를 유도, 경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야 함

□ 추진전략

- 중간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시군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자부담비율 축소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경제 주체 전환 지원

□ 추진계획

- ①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기반 조성
 -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신규 설립 지원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 네트워크 촉진
- 사회적기업 경영안정 확보 위한 금융지원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금융권 대출 이차보전 지원

② 위기 극복 상생 기반 조성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 시설장비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지속성 제고
- 사회적경제기업 연대 활동 지원
 - 경남 사회적경제 DB(유형별, 지역별, 업종·부문별) 구축 강화
 - 시군 지역경제 특성, 주민 정책 수요, 서비스 현황 등 공공데이터화
 - 시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광역과 시군의 통합적 정책 환경 조성 등 공동사업 기반 마련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중간지원조직 설립 시군수	개소	4	4	5	5	6	
금융지원 수혜 기업 수	수	10	10	10	10	10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건수	3	3	11	10	10	
사회적경제기업 도내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 수	개소	3	3	3	3	3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경영안정 확보 위한 금융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연대 활동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318,000	318,000	318,000	318,000	318,000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구축	국비		-	-	-	-	-	
	도비		3,000	3,000	3,000	3,000	3,000	
위기 극복 상생 기반 조성	국비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도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p>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p> <p>주무부서: 사회경제노동과</p> <p>협업부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산업인력개발위원회</p> <p>위원회: 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관계부처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일자리종합대책 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공유경제추진계획 사회적기업지원계획 소상공인지원육성에 관한계획 전통시장활성화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대상 간 네트워크 및 영역 간 연계, 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 (환경)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친환경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 (거버넌스) 다양한 주체들 간 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 등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의 만족도 제고

작성자

사회경제노동과장 (☎211-3450) / 사회적기업파트장 (☎3482), 사회경제혁신타운파트장 (☎3492)

U N 목 표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경 남 목 표	9.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RE100 참여율	0	5	20	5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수				

9-1 저탄소신산업(탄소중립 선도산업) 생태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남도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제조업 비중의 지속적 감소가 있었고, 조선업 붕괴, 자동차 산업 및 부품업의 정체에 따른 비중 감소가 있었으나 여전히 높은 2차산업 비중을 가지고 있음. 특히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이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경남내 산업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차(%)	3.9	3.7	3.7	3.7	3.6	3.5	3.7	3.8
2차(%)	53.5	53.0	51.6	50.3	50.3	50.1	48.4	43.6
3차(%)	42.6	43.3	44.6	46.0	46.1	46.4	47.9	52.6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당해년가격), 각년도

주석: 1차산업(농림어업), 2차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3차산업(그 외)

- 조선,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기타운송장비 산업, 자동차 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비중이 큼
- 1차·2차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부품 및 소재산업이 그 다음의 비중임
- 특히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철강 및 알루미늄, 석유화학, 조선, 내연기관자동차 부품 등)이 주력산업이어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임
- 이러한 경상남도의 산업구조상 탄소중립은 큰 도전과제지만 미루거나 피하기 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 전 세계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력사용량의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ESG 추구에 따른 시장의 신뢰 확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기업들의 (협력업체) 공급망 관리 강화 대응,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제품에 관세 부과)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 친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노력은 RE100 참여로 확산하고 있음.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년)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임
 -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세계적 기업이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하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음
 - CDP 위원회는 The Climate Group과 2014년부터 RE100 캠페인을 주도한 비영리 민간단체
-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RE100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의 전기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
 -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공단은 RE100 지원기관으로서 이행수단별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국내 RE100 이행수단(안)>

이행수단	개요
① 녹색 프리미엄제	·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 (한전, '20.12월 1차 입찰) · 녹색 프리미엄 판매 재원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 예정
② 인증서(REC) 구매	·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 개설 예정 (에너지공단, '21.1월)
③ 제3자 PPA	·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추진 (한전, '21.1월) · 발전사업자 ↔ 한전, 한전 ↔ 전기소비자 등 2개 계약 체결
④ 지분 투자	·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⑤ 자가 발전	·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2021

- 향후 RE100 참여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부담 완화 가능
 - 정부는 RE100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
 - 국내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됨
- 정부는 기업 외에 공공기관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
 - RE100 캠페인은 연간 100GWh 이상을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대상이나,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 예정

<경상남도내 연간 전력다소비 업체 현황>

연간 전력소비량	업체수
100Gw이상 소비	14호
10Gw이상 소비	167호
1Gw이상 소비	278호
100Mw이상 소비	289호 ※100메가 이상 소비업체는 계약전력 5000킬로와트 이상인 업체로 한정해서 추출

출처: 한국전력공사, 2021

- 경상남도의 산업단지 수는 2010년 149개에서 2019년 206개로 57개(국가 2, 일반 53, 농공 2) 증가하였으며, 지정면적은 2011년 116,977천 m^2 에서 2019년 136,678천 m^2 로 19,701천 m^2 가 증가함
 - 2019년 말 기준 도내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산업시설용지(분양대상면적)는 전국의 11.4%로 2010년에 비해 10,509천 m^2 증가한 78,405천 m^2 로 나타남
- 2019년 말 기준 경상남도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수는 57개로 전체 산업단지수(290개)의 27.7%를 차지하며, 전국 노후산업단지수(445개)의 12.8%를 차지함

- 국가산업단지 경우 대부분 1970년대 개발된 산업단지로 시설의 노후화 및 지원기능 등이 미약하여 산업단지로서 경쟁력 저하되어 4차 산업혁명, ICT 기술발달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산업단지를 저탄소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시급한 상황임.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스마트그린산단, 클린팩토리 사업 지원을 통해 경남의 산업을 저탄소산업으로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는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경제지도 전반에 대한 기획을 추진함. 특히 경남형 제조혁신을 위하여 스마트 공장보급 확산사업에 지역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스마트공장, 지역R&D체계, 경남형 창업생태계 제안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새로운 경남의 도정4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9년까지 79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에너지다소비 경남 기업의 RE100 참여를 지원
- RE100을 공공기관, 일반기업으로 확산
- 민관산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
- 경상남도 산단의 그린화 지원

□ 추진계획

- ① RE100 기업 지원
 - RE100 컨설팅 및 행정 지원
 - RE100 컨설팅단 운영
 - 경남 RE100 민관산협의회 운영

- ② 저탄소산단 전환 지원 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RE100컨설팅 지원수	건	2	5	5	5	10	10	10	
경남RE100협의회 운영수	건	-	1	1	1	1	1	1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건수	건	1,911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누적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RE100 컨설팅 및 행정 지원																				
경남 RE100 민 관산협의회 운영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0	10	10	10	10	
RE100 기업 지원	국비	0	0	0	0	0	
	도비	10	10	10	10	10	협의회운영
저탄소산단 전환 지원 사업	국비	-	-	-	-	-	
	도비	-	-	-	-	-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부 주무부서: 에너지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협업부서: 환경정책과 위원회: 에너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경남 지역에너지기본계획 ▪ 2030 경남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 **기대효과**

- (경제) 저탄소 경제로 선제적 대응으로 미래경쟁력 확보
- (사회) 좌초위기산업 생태계의 전환을 통한 고용활성화
- (환경) 저탄소 친환경 기업경영으로 환경보전 기여
- (거버넌스) 민관산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 추진

작성자	에너지산업과장 (☎211-2250) / 신재생에너지파트 (☎2282)
작성자	인공지능산업과장 (☎211-3950) / AX실증지원파트 (☎3972)

□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의 두 개념이 결합해서 태동한 개념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BCS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이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와 사회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이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라 정의
 -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다양하지만 윤리경영, 투명경영, 환경경영,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 지속가능경영과 유사하게 통용되고 있음
- 산업계에서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일찍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를 최근에는 구체화해서 최근 ESG가 주목받으며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음
 -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뜻하며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
 -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최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등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짐
 - 환경(Environment)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의 다양성, 물 부족, 폐기물 관리, 동식물보호, 토지이용, 에너지사용(신재생에너지), 원자재 채굴, 환경 관련 법 규제 위험, 재활용 등이 있음. 기업이 친환경적인 생산, 판매, 경영을 전개하는 것임
 - 사회(Social)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고객만족,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참여, 인권, 노동기준 등이 있음. 사회적책임이 투자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이윤획득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사회적 책임 경영은 단순한 기부활동이 아닌 기업이 활동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지배구조(Governance)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실적 악화로 직결되는 불상사의 회피, 부패 정도, 임원 성과, 보상 및 정치기부금과 내부고발자 제도 등이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인 한화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ESG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는 분산탄 사업을 완전히 매각함
 - 경상남도는 방위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해외 수출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짐
 - 지속가능경영은 조직과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 조직의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 활동
 - 지속가능경영은 사회책임경영 CSR, 윤리경영, 친환경경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로 대표되고 있음
 -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그룹 등은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개편하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ESG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추가해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
 - 지속가능경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과 재무, 경영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어서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남에서는 민선8기 ESG행정강화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활용한 민간의 스마트공장 자발적 확산체계를 만들고 있음
 - 이러한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지속가능경영 분야까지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RE100 참여도 현재는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지만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지역 경제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추진전략

-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과 행정적인 지원
-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 유도
- 지속가능경영과 보고서 작성 컨설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 유도

□ 추진계획

- ① 경남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실현
 - 중소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수요 등 현황 파악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방안 마련 및 컨설팅 운영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행정적 지원
- ② 대기업-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ESG) 상생협력
 - 경남도-대기업-중소기업 ESG 확산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지속가능경영 행정 지원 건수	건	-	-	2	2	2	3	3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횟수	건	-	-	30	30	40	40	50	
ESG 확산행사 개최 건수	건	-	-	2	2	2	2	2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중소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수요 등 현황 파악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방안 마련 및 컨설팅 운영																				
대기업-중소기업 ESG 확산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200,000	100,000	150,000	180,000	180,000	
경남 중소기업 지속가능 경영 실현	국비		-	-	-	-	-	
	도비		100,000	50,000	50,000	80,000	80,000	
대기업-중소기업 지속가능 경영(ESG) 상생협력	국비		-	-	-	-	-	
	도비		10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산업정책과 협업부서: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 준비
- (사회)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 (환경)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환경의 보전
- (거버넌스)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상생

작성자

산업정책과장 (☎211-3010)/ 산업정책파트 (☎3012)

U N 목 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경 남 목 표	10.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불평등을 완화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사회지원율	77.9%	80%	90%	100%
	※ 경남 사회조사 지표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사회지원율				

10-1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 배경 및 필요성

- 주거는 인간의 존엄과 안전한 삶을 위한 기본권으로, 모든 도민이 적정한 주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도의 중요한 책무임.
- 특히 소득·자산 격차는 주거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주택 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체감 가능한 주거안정으로 직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KOSIS(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9%이며 경상남도는 109.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그러나 주거권 관점에서는 공급량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 입지 접근성,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중위수)은 15.8%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보여 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존재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요구됨.
- 가계지출 측면에서도 주거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통계청 「2024년 4/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289만 원이며, 이 중 주거관련 지출 비중은 12.2%임. 특히 소득 1분위 가구(2024년 4분기)의 주거관련 지출 비중은 19.9%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필수지출 중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 경상남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지역·대상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달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에서는 ‘주거사다리를 놓는 주거복지 실현’을 4대 추진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역·대상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경상남도 주거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응답 가구의 57.7%가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매우 부담 13.6%, 조금 부담 44.1%), 청년가구 67.3%, 신혼부부가구 67.2%, 노인가구 55.8%로 계층별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남.
- 또한 경상남도는 노후주택 증가와 지역 간 주거여건 격차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주거실태조사(2021) 및 주택총조사 분석 결과,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은 24.47%,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7.88%로 향후 노후주택 증가가 예상됨.
 -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51.09%로 높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상남도 내 빈집은 9,790호(2021.3.12. 빈집실태조사 결과)로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주거 정책에서의 빈집활용과 노후 불량주택 문제(경남 주거용 건축물 48만3571동 중 20년 이상 건축물은 32만7689동으로 전체 67.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 등이 주거 빈곤의 시급한 이슈임
 - 현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 중으로 추후 빈집뱅크, 빈집플랫폼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음
- 이에 빈집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민간 노후주택 건축물의 그린 리모

델링 지원 확산 필요

□ 추진전략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의 전면확대
- 체계적인 빈집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대상 확대

□ 추진계획

- ①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 경남형 청년 주거수당 지원 확대
 - 청년 주거(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 추진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계층 청년 주거수당(월세) 지원사업 추진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 전면확대
 -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을 통해 맞춤형 공급정책 발굴·수립
 -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맞춤형 주거 정보 지원
- ② 기후위기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
 - 노후 불량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 취약계층 주거 개선
(수선유지급여 지급, 장애인 주택 개선, 농어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 민간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 취약계층 이용 공공시설(경로당, 노인정)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취약계층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빈집 활용프로젝트
 - 빈집 실태조사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빈집 활용계획(공공주택, 공원, 쉼터, 주차장 등) 마련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p>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무부서: 주택과, 건축과 협업부서: 청년정책과 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종합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 주거복지로드맵 2.0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 (2023 ~ 2032) ▪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 경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 도정 4개년 계획 ▪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주거종합 수립 계획 ▪ 시군 그린뉴딜 추진 계획 ▪ 시군 공동주택 계획 ▪ 시군 빈집정비 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주거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회) 주거권 보장을 통한 불평등 해소
- (환경)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생태계 보전 기여
- (거버넌스) 주거 기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거버넌스 구축

작성자	건축과장 (☎211-4310) / 건축관리담당 (☎4322)
작성자	주택과장 (☎211-4350) / 주택정책담당(☎4352), 청년주택담당 (☎4362), 주거복지담당 (☎4382)

□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함.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UN아동권리협약임
 -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임
 -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음
- UN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기본권을 담고 있음. 특히,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담고 있음
-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지와 방임을 말함
 -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1년 아동 십만명당 502.2건으로 2020년 401.6건에 비해 증가하였음. 2001년 아동 십만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8세 미만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 경상남도는 민선8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를 도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2023년 3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함.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및 피해아동 지원 필요함. 특히, 장애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지원은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

- 아동학대발견율(아동인구 천명당 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7%로 증가했으며, 2021년(잠정)3.7%로 증가함

□ 추진전략

-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 아동보호 인프라 강화
- 대응체계 보완
-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 추진계획

- ①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확충
 - e아동행복지원사업 조사 내실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
- ②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사례관리 강화
 - 민관경 합동교육, 정보연계협의체(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고위험군 아동대상 민관경 합동점검 확대
 - 방문형 가정회복 서비스 운영
 -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대
 - 전담 의료기관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e아동행복지원 사업수	회	-	4	4	4	4	4	4	
아동학대 보호 인포와 확충 개소수	개	-	12개소 이보전 : 6 쉼터 : 6	15개소 이보전 : 8 쉼터 : 7	16개소 이보전 : 8 쉼터 : 8	16개소 이보전 : 8 쉼터 : 8	16개소 이보전 : 8 쉼터 : 8	16개소 이보전 : 8 쉼터 : 8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 동 건수	건	-	4	4	4	4	4	4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횟수	회	-	정보연계협의체 연4회 이상, 합동교육 1회	정보연계협의체 연4회 이상, 합동교육 1회	정보연계협의체 연4회 이상, 합동교육 1회	정보연계협의체 연4회 이상, 합동교육 1회	정보연계협의체 연4회 이상, 합동교육 1회	정보연계협의체 연4회 이상, 합동교육 1회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가구수	가구	-	40가구	80가구	90가구	95가구	100가구	100가구	
상담원 1인 사례 관리 건수	건	-	36건	32건	28건이하	28건이하	28건이하	28건이하	
전담의료기관 운영 수	개소	-	6개소 (도, 시군5)	11개소 (도, 시군10)	16개소 (도, 시군5)	19개소 (도, 시군8)	19개소 (도, 시군8)	19개소 (도, 시군8)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e아동행복지원사업 조사 내실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																				
민관경 합동교육, 정보연계협의체(실무협의회) 운영활성화																				
고위험군 아동대상 민관경 합동점검 확대																				
방문형 가정회복 서비스 운영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7,059	7,199	6,978	7,015	7,053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확충	국비		4,375	4,347	4,200	4,225	4,250	
	도비		2,188	2,174	2,100	2,112	2,125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국비		264	352	352	352	352	
	도비		132	176	176	176	176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국비		50	75	75	75	75	
	도비		50	75	75	75	75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주무부서: 보육정책과 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유관기관: 경남교육청,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아동보호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아동보호 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 구성에 기업ESG 협력 강화
- (사회) 아동학대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재학대 근절
- (환경) 기후위기 취약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
- (거버넌스)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작성자	보육정책과장 (☎211-4750)/ 아동정책파트(☎4752)
------------	-----------------------------------

U N 목 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경 남 목 표	11.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향후 10년간 정주의사율	78%	80%	84%	9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향후 10년간 정주의사율				

11-1 지역소멸, 격차해소를 위한 이동권 보장 교통서비스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인구 저성장 추세가 고착되며 지방소멸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농산어촌 마을 단위의 작은 공간 범위뿐 아니라 지방도시의 동 지역에서도 인구감소, 저출생 및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향후 30년 내 82개 군 지역 중에서 62곳, 읍면동 3,482곳 중에서 1,383곳 소멸 전망
 - 경상남도 소멸위험지수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30년 내 소멸위험 수준은 다음과 같음

경상남도 읍면동별 소멸위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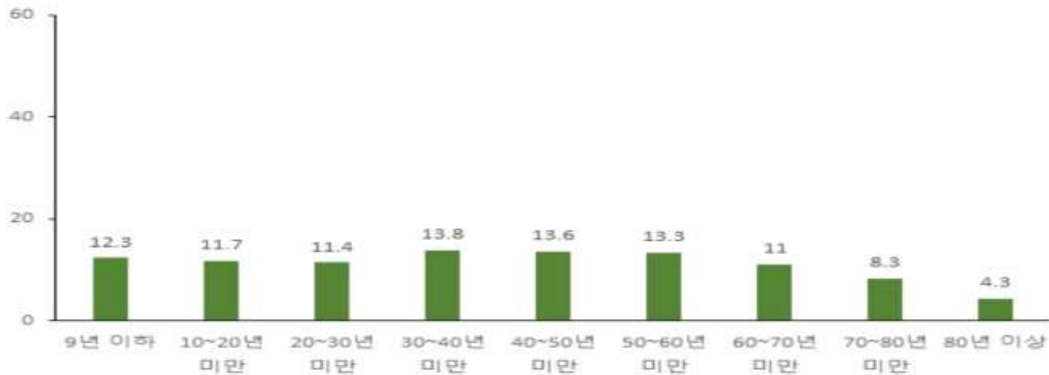


출처 : 경남공감(Vol.74/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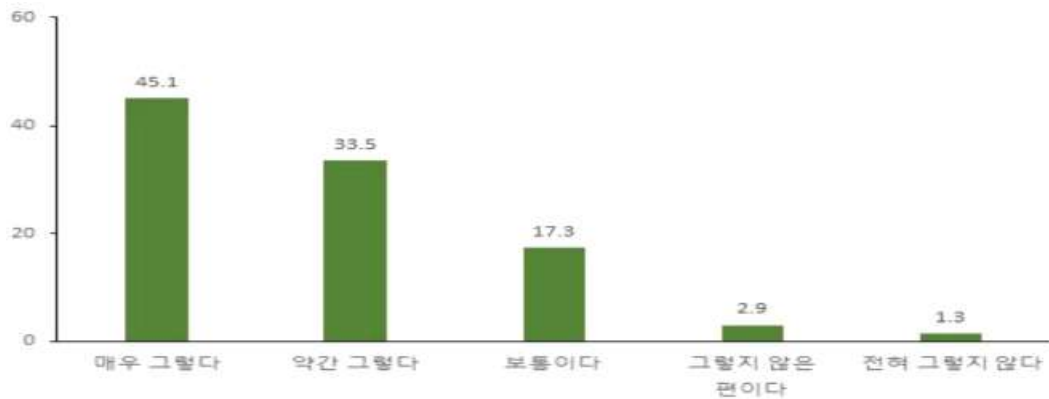
- 이러한 인구과소현상이 진행되는 지역에 살더라도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사회·경제 규모가 축소되어 재정 여건 악화로 이어지며 중국에는 공공인프라 및 사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특히 지방 도시는 대도시와 비교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고령화 인구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이 커져 맞춤형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지역 거주기간 및 정주 의사를 살펴보면 경남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도민의 비율이 높아 지역 서비스 구축이 지속가능성에 중요 요인임(추후 경남 정주의사를 통계조사 시 세대별, 청년 등을 추가한 분리통계조사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관리 지표로 활용)

지역 거주기간



향후 10년 정주의사



출처 : 경남사회조사보고서(2018)

- 농림어업 총조사(2015년)에 따르면 전국 3만6792개 행정리 가운데 2349곳은 시내버스가 없고, 하루에 1~3회 운행하는 마을도 4390곳에 달하며,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10회 미만인 마을은 1만9854곳으로 전국 행정리 중 절반이 넘음
-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중교통 부족,

서비스 다양화'를 주요 이슈로 뽑은 자치단체로 '합천, 하동, 고성, 밀양, 함안, 통영'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 교통수단분담률을 살펴보면 전국평균보다 승용차 이용률이 높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음

단위 : %

구분	도보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자전거	기타
전국	27.6	35.1	17.9	7.9	6.6	1.6	3.3
경남	36.7	38.3	12.8	0.6	5.4	1.5	4.6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2018)

- 중앙정부는 농어촌 대중교통 사각 지역 이동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통서비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도 도민의 교통복지 및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거버넌스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노력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을 통해 교통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있음(2025.12 기준 시외·시내·농어촌 4,913.1km 구간이 벽지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택시)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택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도내 18개 시군에서 공공형 택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하고 있음(2025.12 기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도내 17개 시군에서 공공형 버스 운영을 통해 교통 소외지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음(2025.12 기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밀양시, 양산시, 고성군에서는 공공형 버스 사업을 통해 이용객 예약에 따라 버스의 운행시간 및 거리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수요응답형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동일 생활권 내 자치단체 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 광역환승할인제, 도내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확대 등의 대중교통 기본권 확대 사업을 시행(2020)하는 동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이외에도 바우처 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경상남도는 도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벽지 노선 지원’,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벽지 노선 및 수요응답형 노선 추가 도입’,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등 정책이 시군 전반에 확대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제 개편 논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제도 도입 논의’로 확대함으로써 경남도민 전반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

□ 추진전략

- 벽지 노선 지원을 통해 벽오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기본권 보장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다양화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제공으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참여를 통한 대중교통 운영 및 요금체계 개선 검토

추진계획

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기본권 보장

- 벽지 노선 지원 확대
-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

②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제도 도입

- 수요응답형(DRT) 노선 확대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벽지 노선 총 노선 길이	km	3,400	3,570	3,749	3,936	4,000	4,200	4,500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	회	20,000	5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수요응답형(DRT) 노선 수	개	21	25	30	36	40	40	40
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 이용인원	명	959,079	1,054,984	1,160,486	1,200,000	1,250,000	1,280,000	1,300,000

※ 2025년~20207년 2024년 기준 적용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벽지 노선 지원																				
바우처 택시 도입																				
수요응답형 노선 수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인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0,831,000	11,001,000	11,001,000	11,001,000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기본권 보장	국비	2,530,000	2,657,000	2,657,000	2,657,000	2,657,000	
	도비	843,000	886,000	886,000	886,000	886,000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제도 도입	국비	6,072,000	6,072,000	6,072,000	6,072,000	6,072,000	
	도비	1,386,000	1,386,000	1,386,000	1,386,000	1,386,000	

※ 2025년~2027년 2024년 예산 적용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p>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무부서: 교통정책과 협업부서: 시, 군 위원회: 해당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외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 벽지노선 지원 계획 바우처 택시 지원 계획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중교통계획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 기대효과

- (경제) 공적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이동비용 절감
- (사회) 이동 기본권 보장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 (환경)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따른 개인차량 이용 감소
- (거버넌스) 민관협의 공론을 통한 거버넌스 증진

작성자

교통정책과장 (☎211-4110) / 버스지원담당 (☎4152), 교통편의담당 (☎4162)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2.1%(2024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1970년 50.1%)
- 경상남도는 총인구 3,228,380명 중 도시인구가 2,821,395명으로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87.4%(2024년)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2000년 79.7%, 2005년 84.4%, 2010년 84.5%)
 - 경상남도 인구 시도 간 순유출(2020-2024년) 규모는 주로 서울·경기·인천(60.9%)이 가장 많았고, 충남(6.2%)이 다음으로 많았음. 순유출된 연령별층은 20-30대(82.1%)가 가장 많았음
 - 시도간 유출사유는 직업(42.2%), 가족(21.9%), 주택(14.0%), 교육(12.3%), 주거환경(3.1%) 등의 순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었음.
 - 2020~2024년 기준 경상남도 내 시군구 간 순이동의 경우에는 청년(19~39세) 인구는 진주(4,422명), 창원(2,393명), 김해(2,355명), 양산(66명) 등 주요 도시 지역 중심으로 순유입되고 함안(-1,691명), 통영(-1,467명), 하동(-1,042명) 등에서는 순유출되었음.
 - 이러한 인구 이동을 비롯하여 낮은 출생율(2025년 기준 0.88명) 등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음
- 경상남도는 동부와 서부 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완만히 성장하는 동부경남에 비해 서부경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기초생활 여건 및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도민 삶의 질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광역 교통망 부족으로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지 못하였으며, 의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함
- 이에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멸위험지역 성장기반 마련 및 공공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시군 소멸위험지역 증가

도내 소멸위험지역 '20년(5곳) → '24년(10곳) 2배 증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25), 지방소멸위험지수(2024년 3월)

- 동네 생활 SOC 구축을 통한 인프라 조성으로 경남도민의 지역 만족도를 높여 정주율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20분 마을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따라 마을 단위의 최저기준(도보 최대 15분)과 지역거점(차량 최대 30분)을 참고하여 제안
 -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살리기를 통한 생활SOC 구축 및 공동체 회복 추진
 - *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 개선 유도 사업
- 경상남도는 안정적 지역소멸대응기금 운용과 연계하여 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2026년까지 경상남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3개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5,487억 원을 확보함. 연계사업으로 농촌지역 주거플랫폼 구축(90억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200억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160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임

□ 추진전략

- 동네 SOC 구축 거버넌스 활성화
- 민관산학 참여 공론 환경 조성
- 수요자 중심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도모
- 지역 소멸위기 등 사회적 문제 대응

□ 추진계획

- ① 동네 생활 SOC 구축 확산
 -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동네 생활 SOC 구축
 - 행정협의회 운영 및 행정지원 역량기반 강화
 - 현장 기반 생활 SOC 사업 추진
 -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지원 기반구축
- ② 소멸대응기금 조성 및 운영
 - 소멸 고위험지역 대상 시설 지원
 - 소멸지역 주민참여 사업 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회	14	15	16	17	17	17	17	
현장지원센터 지원 건수	회	-	-	-	-	13	13	13	
주민참여 프로그램 횟수	회	-	-	35	40	45	50	55	
주민협의체 운영 횟수	회	-	-	50	57	64	71	78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행정협의회 운영 횟수																				
현장지원센터 지원 건수																				
주민참여 프로그램 횟수																				
주민협의체 운영 횟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0,560	10,800	10,800	10,800	10,800	
동네 생활 SOC 구축 확산	10,560	10,800	10,800	10,800	10,800	
주민주도 커뮤니티 문화 조성 지원						

※ 동네 생활 SOC 재원 : 국60%, 도12%, 시군28%(2025년 ~ 2027년 2024년 적용)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무부서: 도시정책과 협업부서: 행정과, 인구정책담당관 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생활 거점 조성)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18~22)개발계획 도시재생사업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도시재생 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소멸위험지역 감소 및 역내 불균형 해소
- (사회) 도민 기초생활최저기준 인프라 구축으로 삶의 질 상승
- (환경) 20분 생활권 구축으로 개인별 차량이용(탄소배출량) 감소
- (거버넌스) 민관산학 협력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작성자	도시정책과장 (☎211-4210) / 도시재생담당 (☎211-424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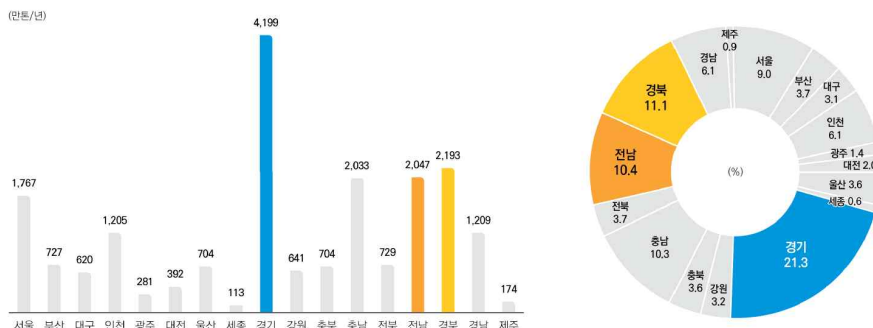
U N 목 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경 남 목 표	12. 생산·유통·소비의 전환으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생활계 순환이용률	47.45%	56.87%	61.10%	63.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자원순환이용률				

12-1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남도의 폐기물발생량은 2021년 기준 1,209만톤/년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음. 그중에서도 경남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22만톤/년으로 전국 발생량의 7.3%를 차지하며,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은 각각 1.39kg/일/인, 0.99kg/일/인으로 전국 평균(각각 1.18kg, 0.87kg)보다 높은 수준임
-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에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비율이 전국 발생량 대비 8.2%로 다른 종류에 비해 높았음.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크게 감소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임

2021년도 지역별 폐기물발생 현황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경상남도 2021년 종류별 폐기물 발생현황(만톤/년, %)

경상남도	총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	1,209	122	49	565	430	42
전국발생량 대비 비율	6.1	7.3	8.2	6.7	5.1	7.0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경상남도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변화(만톤/년)

경상남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량 총계	1,249	1,245	1,264	1,168	1,178	1,209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2020년 기준 경상남도에는 소각시설 25개소, 매립시설 33개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6개소, 재활용품 처리시설 23개소, 에너지화시설 8개소 등 총 105개소가 운영 및 추진 중
 - 운영 중 81개소, 사업 추진 중 24개소이며, 현재 확충 계획 수립 중인 시설은 24개소

경상남도 폐기물 처리시설별 비교 총괄

구분	계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재활용	에너지화
합계 (운영중 + 추진중)	105개소 11,625억원	25개소 1,784톤/일 5,203억원	33개소 27,227천m ³ 4,498억원	16개소 875톤/일 540억원	23개소 540톤/일 591억원	8개소 1,825Kw/h 655톤/일 793억원
운영중	81개소 9,658억원	21개소 1,554톤/일 4,492억원	23개소 26,320천m ³ 3,880억원	12개소 735톤/일 397억원	20개소 476톤/일 570억원	5개소 1,825KW/h 235톤/일 320억원
추진중	24개소 1,967억원	4개소 230톤/일 711억원	10개소 1,756.1천m ³ 618억원	4개소 168톤/일 143억원	3개소 64톤/일 21억원	3개소 420톤/일 473억원
계획중	11개소 1,198억원	3개소 275톤/일 465억원	2개소 657.5천m ³ 176억원	1개소 80톤/일 115억원	3개소 71톤/일 106억원	3개소 380톤/일 754억원

출처: 경남 자원순환 시행계획(2020)

- 생태계 파괴 및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가 지구환경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의 필요성이 대두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에너지화 포함)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고 있음

- 정부는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원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 중에 있음
 - 자원순환사회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물질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함
 - 그동안 국내 폐기물 관리방식은 감량 → 재활용 → 처리(소각·매립)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고수하여 왔으나, 자원순환형 사회에서는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효율적 생산·소비 → 물질재활용 → 에너지회수 → 처리선진화 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함
- 경상남도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2022년 1월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이밖에도 자원순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자원순환기본법」이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한계에 직면해왔음
 -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하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이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전 단계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집행적인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폐기물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함
-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음. 개정되는 법률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제19조)을 포함시켰으며, 순환경제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

제특례에 관한 조항(제27-34조)이 시설 및 강화되었음

- 자원순환사회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천연자원 사용 최소화를 표방해왔다면, 순환경제사회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추구함(제2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만큼, 지역 기반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간의 역할 정립이 요구됨. 또한 순환경제사회 체계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법률 시행에 앞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경상남도는 2023년을 순환경제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700억 원을 투자하며, 2026년까지 4,2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임(경상남도, 2023)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3곳, 공공 열분해시설 2곳, 생활자원회수센터 1곳을 신설해 소각시설 광역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남환경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재활용 동네마당 59곳 설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62명 고용,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사업 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 농촌 폐비닐·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사업 확대 추진. 마을 단위 영농폐기물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61곳 추가 설치
- 종합해보았을 때, 경상남도는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18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경남형 순환경제 촉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추진전략

- 순환경제사회 비전을 담은 제도 정비 및 체계 구축
- 시군의 순환경제체계 전환 촉진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추진계획

- ① 순환경제사회 촉진 사업 추진
 - 자원순환 이행 성과관리
 - 참여 유도형 자원순환 시책 추진
- ② 재활용 기반확충 및 수거체계 확립
 -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 자원순환 수거체계 확립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순환경제 이행 성과평가 추진실적 제출 건수	건	1	1	1	1	1	
자원순환 시책 추진 건수	건	4	4	4	5	5	
자원화시설(바이오가스화 등) 사업 건수	건	7	7	7	7	7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폐건전지 등)	kg/ 인	0.180	0.182	0.330	0.331	0.332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원순환 이행 성과관리																				
참여 유도형 자원순환 시책 추진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자원순환 수거체계 확립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39,689,000	40,482,000	40,482,000	40,482,000	40,482,000	
자원순환 성과평가	국비	-	-	-	-	-	
	도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재활용 기반확충 및 수거 체계 확립	국비	28,001,000	28,561,000	28,561,000	28,561,000	28,561,000	
	도비	11,673,000	11,906,000	11,906,000	11,906,000	11,906,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기후부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 집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채취-생산-폐기의 선형 경제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체도구축
-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도민 인식과 실천의 확대
- (환경) 순환경제사회의 구축으로 탄소중립 기여
- (거버넌스) 민관 순환자원 추진 거버넌스 촉진

작성자	환경정책과장 (☎211-6610) / 자원순환담당 (☎6642)
------------	-------------------------------------

□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자연 자원과 유해 물질 사용,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과 생산을 의미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착한소비, 윤리적인 소비로도 인식함
 - 이를 위하여 도민들의 인식증진과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의 자원순환에 대한 노력은 목표 대비 미진하였는데, 2018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경상남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목표량을 초과하였음
 - 2018년 기준 총발생량은 4,003.9톤/일로 목표 수준인 3,393.1톤/일을 18%가량 초과하였으며, 2018년도 전망치였던 3,684.2톤/일보다 높게 나타남
 - 재활용률은 2012년 51.2%, 2015년 52.1%, 2018년 57.3%로 조사되었으며, 목표수준인 2012년 52.3%, 2015년 54.8%, 2018년 57.5%에 비해 2% 가량 낮은 수준
 - 재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수준 이내이며, 소각률은 목표와 비슷한 수준이며, 매립률도 목표보다 높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경상남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는 매립률은 감소 전망하고 재활용률과 소각률을 증가 전망하였으나, 성과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의 높은 증가로 인해 매립률과 재활용률 및 소각률 달성의 어려움이 있었음
- 다만, 재활용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소각 및 매립률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임
- 경상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2020.12)에 따르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전망은 다음과 같음

경상남도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발생 전망

년도	인구(명)	발생량 (톤/일)	원단위 (kg/인·일)	가연성 (톤/일)	불연성 (톤/일)	재활용품 (톤/일)	음식물류 폐기물 (톤/일)
2018	3,448,292	3,831.80	1.11	1,320.70	534.2	1,088.40	888.5
2019	3,465,512	3,906.40	1.13	1,346.40	544.6	1,109.60	905.8
2020	3,482,731	3,981.50	1.14	1,372.30	555.1	1,130.90	923.2
2021	3,499,951	4,057.10	1.16	1,398.40	565.6	1,152.40	940.7
2022	3,517,170	4,133.30	1.18	1,424.60	576.2	1,174.10	958.4
2023	3,534,390	4,210.00	1.19	1,451.00	586.9	1,195.80	976.2
2024	3,551,610	4,287.20	1.21	1,477.60	597.7	1,217.80	994.1
2025	3,568,829	4,365.00	1.22	1,504.40	608.5	1,239.90	1,012.10
2026	3,586,049	4,443.20	1.24	1,531.40	619.4	1,262.10	1,030.30
2027	3,603,268	4,522.00	1.25	1,558.60	630.4	1,284.50	1,048.50

출처: 경남 자원순환 시행계획(2020)

- 국가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 따르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하여 10년간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국가의 2027년 기준 총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저감목표는 20%이며, 인구 원단위 발생량 저감목표는 15%
 - 순환이용율은 70.3%에서 82.0%, 최종처분률은 9.1%에서 3.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확산과 경상남도의 지원이 절실함. 특히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정책으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지역공동체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
 - 리빙랩 등을 통해 동네 쓰레기 문제점 발굴과 문제해결 방안 찾기, 주민토론회, 자원순환 홍보, 1회용품 안 쓰기, 바다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거버넌스 활동 추진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확산을 위하여 1회용품의 제한과 저탄소 제품의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대체가능물품 사용조사·점검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유도

- 저탄소 제품의 확대와 재활용 용이성 친환경제품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정보제공과 지원으로 소비와 생산을 확산 유도

□ **추진전략**

-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 지속가능한 제품의 확산 기반 마련
- 친환경제품의 정보제공을 통한 책임소비 유도
-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최소화정책

□ **추진계획**

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제고

- 1회용품 없는 도시 시범지정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원칙적 금지
- 1회용품 사용 억제 관리(강화)
- 대체서비스 기반 폐기물 감량

②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확대

- 제품 탄소발자국 및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제품 정보제공 확대 (녹색구매지원센터)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참여 기관 수	개소	13	16	20	24	28	
1회용품 규제 관련 참여형 제도, 홍보 실적	건	3	3	3	5	5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시설 운영 건수	건	5	5	6	6	7	
찾아가는 녹색소비 정보제공 실적	횟수	7	8	9	10	11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원칙적 금지																				
1회용품 사용 억제 관리(강화)																				
대체서비스 기반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없는 도시 시범지정																				
녹색소비 정보제공 확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회용품 없는 도시 조성	국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도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기후부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 집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채취-생산-폐기의 선형 경제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제도구축
-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도민 인식과 실천의 확대
- (환경) 순환경제사회의 구축으로 탄소중립 기여
- (거버넌스) 민관 순환자원 추진 거버넌스 촉진

작성자

환경정책과장 (☎211-6610) / 환경평가조정담당 (☎6622), 자원순환담당 (☎6642)

U N 목 표	13. 기후변화 대응				
경 남 목 표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50년 경남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18기준	2025	2030	2040
	온실가스배출량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확정 예정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13-1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은 역대 가장 장마를 겪었으며 기후패턴이 바뀐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15년)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년) 이후 2050 탄소중립은 세계 의제화됨
-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22년 3월 시행)함
-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2022년 7월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8월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함
- 2023년 4월 정부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소요기간 및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믹스 등을 감안했을 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
-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2018)에 따르면 2030년 경상남도 관리권한 영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값은 21,911

천톤CO_{2eq.}으로 2018년 19,283천톤CO_{2eq.}대비 1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상남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

구분	건물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총계
	가정	상업	합계					
2023년	3,937	5,168	9,105	1,003	7,752	1,163	1,237	20,261
2024년	3,983	5,249	9,232	1,015	7,847	1,157	1,238	20,489
2025년	4,031	5,330	9,361	1,028	7,946	1,153	1,238	20,726
2026년	4,082	5,410	9,492	1,040	8,048	1,145	1,239	20,963
2027년	4,135	5,489	9,624	1,052	8,152	1,143	1,239	21,209
2028년	4,188	5,567	9,755	1,063	8,219	1,138	1,239	21,414
2029년	4,241	5,644	9,885	1,075	8,328	1,134	1,239	21,661
2030년	4,293	5,720	10,013	1,086	8,440	1,132	1,240	21,911

출처 : 경상남도, 2030년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2018)

- 또한, 국제적인 기후위기는 경상남도의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탄소국경세 도입,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등 환경규제 강화
 -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경영 확대, 환경 非친화적기업 투자 제한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 확산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수소 산업 급성장 전망
- 따라서 경상남도는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경상남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과제

- 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 마련
 -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 ② 탄소중립 세부이행계획 추진 및 모니터링
 - 세부이행계획 추진 및 모니터링 실시
 -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식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구성	1					
추진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식			1	1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회		1	1	1	1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	■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	■																
추진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	■			■	■			■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총예산액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국비	비	예	산	사	업			
	도비								
탄소중립 세부이행계획 추진 및 모니터링	국비	비	예	산	사	업			
	도비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기후부 주무부서: 기후대기과 협업부서: 경상남도 탄소 중립 지원센터 위 원 회: 2050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제3차 경상남도 기후 위기 적응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 기대효과

- (경제) 탄소중심 경제에서 저탄소경제 전환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 (사회) 탄소감축 정책 추진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 (환경) 탄소감축 및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기여
- (거버넌스) 민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회 수용력 제고

작성자 기후대기과장 (☎211-6650) / 기후변화대응파트 (☎6662)

□ 배경 및 필요성

-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BAU 시나리오 하에서 2040년 경상남도 최종에너지 수요는 9,863천 TOE로 2017년에 비해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상남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BAU)

(단위: KTOE)

부문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산업부문	3,337	3,373	3,408	3,444	3,454	3,463
수송부문	2,924	2,977	3,037	3,111	3,179	3,239
건물부문	2,695	2,765	2,879	2,987	3,079	3,161
최종에너지 총계	8,956	9,115	9,324	9,542	9,712	9,863

출처: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2020)

- 지역의 에너지수요 증가는 경상남도의 기후환경과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과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여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음

분야	주요 영향
수자원	극한 강우 발생 증가
생태계	식물의 생육기간 증가(생육개시일은 앞당겨지고 낙엽 시기는 늦어짐) 온난화로 인한 외래종 서식지 확대 및 위생해충의 발생 증가
산림	지역별, 수종별 산림 성장, 분포, 재해 발생 패턴의 변화
농업	품종별 생산성 변화 및 과수의 재배적지 변화
해양 및 수산	표층 수온 상승, 표층 염분 감소 및 해양 산성화 어획량 감소 및 복상 어종 증가
산업 및 에너지	폭염 및 열대야로 여름철 전력 소비량 증가 고온환경 노출에 따른 근로자 건강 및 기반산업 영향

보건	폭염에 따른 사망자 등 인명피해 증가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 악영향 우려 기온증가에 따른 식중독 증가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20)

- 따라서 각종 사업 수립·추진 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유도를 위하여 예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경상남도는 선제적으로 2021년 예산에 대하여 시범실시하고 2022년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前.기후인지예산서)를 발간하였음
 - 예산편성과정에서 환경 및 기후영향을 고려하고 필요 시 예산변경을 통해 기후친화적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피해를 최소화
 - 국가는 2023년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
 - 또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산업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기후 위기 대응 취약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 등
- 추진전략**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환경 및 기후영향 고려
 -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기후 적응력 강화
- 추진계획**
- ①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 제정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계획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발간	건	1	1	1	1	1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	여부			검토	제정		

□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 제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국비	비	예	산	사	업		
	도비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 제정	국비	비	예	산	사	업		
	도비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기후부부 주무부서: 기후대기과 협업부서: 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2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기후위기 영향평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예산 사업의 기후영향 평가를 통한 저탄소경제 추진
- (사회) 산업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 추진으로 능동적 대처
- (환경) 친환경정책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실현
-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로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제고

작성자

기후대기과장 (☎211-6650) / 기후변화대응파트 (☎6662)

U N 목 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경 남 목 표	14.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준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해양쓰레기 관리기반시설 ⁴⁾ 확충(개소)	126	164	213	341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처리량				

14-1 해양쓰레기 관리 및 친환경어업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남도의 해안선 길이는 2,513km로 유인도 77개, 무인도 729개 총 806개의 도서가 있으며, 지정항만 7개소와 어항 567개소로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경상남도의 해양환경은 각종 오폐물의 어장 내 퇴적으로 양식어장 환경이 점차 오염되고 육상 쓰레기의 바다 유입 및 해양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해양폐기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현존량 총 2만 7천톤 추정(2019년말 기준)
 - 공간별로 해안 24.4%, 침적(바다 밑) 74.5%, 부유 1.1%
-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현존량의 75%, 약 2만톤으로 추정되는 침적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 실태조사 및 폐기물 수거 작업이 어려워 기관주도로 시행되고 있어 집중관리 및 사업 확대 필요
- 경상남도 해안쓰레기 현존량(6.6천톤) 중 도서가 많은 통영이 과반
 - 통영시 3천톤, 거제시 1천톤, 남해군 0.7천톤, 창원시 0.6천톤, 사천시 0.4천톤, 고성군 0.3천톤, 하동군 0.2천톤
- 경상남도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 1만 6천톤으로 추정
 - 전국 연간 유입량 추정치 14만 5천톤의 10.8%를 차지
 - 육상 기인 62.3%, 해상 기인 37.7%(홍수기는 초목류 대부분)

4) 해양쓰레기 집하장(육상·선상) 및 전처리시설

- 양식장 기인 쓰레기(양식장부표, 양식장부자재 등) 비율이 높으며
홍수기에는 초목류가 대부분을 차지함
- 어선어업의 유실 폐어구 및 발생 생활쓰레기는 연간 1,885톤으로
추정되며, 시·군 및 어업인과 협력하여 대책 마련 필요함
 - 창원(405톤), 통영(455톤), 사천(271톤), 거제(329톤), 고성(91톤), 남해(260톤), 하동(74톤)
- 최근 5년간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평균 수거량은 9천톤으로
 - 해수부(마산항) 수거량(1.1천톤) 포함 시 총수거량 10.3천톤
 - 발생원별 일반쓰레기, 초목류 등의 육상 기인이 3.6천톤(40%)이며, 폐어구, 페스티로폼, 패각 등 해상 기인 5.5천톤(60%)
- 경상남도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단계별·공간별 예방 및 종합대책 마련 필요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피해 분야별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피해 : 프로펠러에 어구가 걸리는 피해 심각, 어선어업이 쓰레기로 입는 피해 - 생태계 피해 : 레저용 낚시줄과 바늘로 인한 천연기념물 통영시 홍도의 팽이갈매기 집단서식지 피해 다수 - 관광업 피해 : 선박운항 피해,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발견, 한려해상국립공원 낚시꾼나룻대 고정용 납덩어리 8만4천여 개 추정, 남성분 해수 용출

출처 :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2020년)

- 이에 경상남도는 양식어장과 유·무선도서 지역에 방치된 해양(생활)쓰레기를 적기 수거하기 위해 '19년부터 18,00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 수거·운반선 3척(경남도 123톤, 창원시 99톤, 통영시 89톤)을 건조함
 - 다목적 수거·운반선은 도내 양식어장 및 유·무인도서 등을 대상으로 운항
- 또한 2021년 통영에 해양자원 순환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어업폐기물의 육상 및 선상 집하 시설을 확충하고 점차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별·세척 가능한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양식장 친환경부표 공급 확대 필요

- 도내 양식어장은 2,331건/11,763ha로 대부분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 중이며, 1~2년 사용 후 파손, 연안 방치로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친환경부표 902천 개를 교체(12%)하였으며,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 100% 공급 계획과 2023년까지 시범해역 2개소(자라만, 거제만) 66천ha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77억원을 편성, 친환경부표 110만개 교체로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경상남도는 굴 양식업의 발상지이며, 양식업권 801건, 양식면적 3,475ha로 굴 생산량이 전국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굴 양식 과정에서 매년 28만 톤 정도의 굴 껍데기가 발생해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사료 등으로 약 70%인 19만 톤 정도가 재활용되고, 약 30%인 9만 톤 정도가 미처리 폐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9년부터 동해정해역에 해양배출을 시작하여, 해양배출로 3만 2천톤을 포함, 10만 2천톤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친환경처리비를 대폭 증액하여 도내 연안 6개 시·군에서 해양배출 11만 9천 톤을 포함해 18만 7천톤의 굴 껍데기를 처리함
 - 2019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 도내 굴 양식장의 30%인 약 1,000ha를 ‘개체굴’로 전환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굴 폐각 미발생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한 수출주도형 양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도 경남도의 건의에 따라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함
- 경상남도는 해양낙시공원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2009년에 통영 등대낙시공원, 2015~2016년까지 하동 대치(해와달), 사천 비토, 거제 궁농 등 해양낙시공원 4개소가 준공됨
 - 2019년에 거제 범동복합낙시공원이 준공되어 2020년 5월 개장함
 - 현재 추진 중인 남해해양낙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자연 형성된 소규모 만을 활용, 가두리 낙시터를 설치하여 해양 낙시공원 조성을 추진 예정임

- 그러나 이러한 낚시공원, 낚시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낚시 외에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과의 갈등 심화, 해양환경 오염 가중 등 문제점이 대두되는 실정임
- 따라서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낚시 면허제 도입추진 및 이와 관련된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어업인, 낚시레저인, 관련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낚시면허제 도입 검토
- 낚시면허제 도입 전까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테두리 안에서 낚시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수산자원 관리 및 환경보호 대책 마련

미국 낚시면허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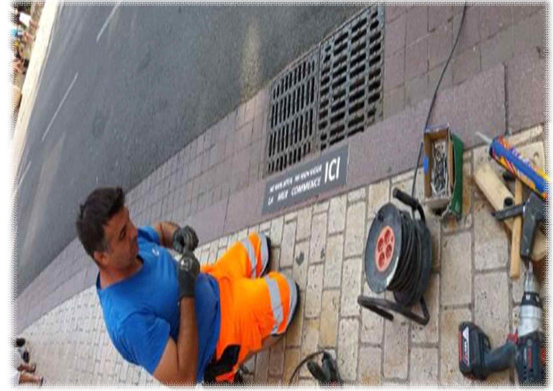
- 캘리포니아주 : 어업 및 게임위원회 설치, 무면허 낚시 경범죄처벌, 낚시자유일(Free Fishing Days)지정 운영(특정어종만)
- 메릴랜드주 : 거주자 유무, 민물 및 바다 등 낚시 지역, 면허 기간에 따라 구분 관리, 낚시자유일운영 및 바다낚시(인) 등록규정, 낚시교육(아동체험교육, 아동청소년 낚시 클럽운영, 생애첫 낚시 프로그램 등)
- 뉴저지주 : 연방정부 규정보다 더 세분화하여 어종별 낚시 기간, 마릿수 및 체장 제한 바다낚시 등록 프로그램 및 낚시어선 등록 규정 엄격하게 적용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2019). 재구성

- 경상남도는 해양오염 방지와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시민들이 직접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바다의 날’ 및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개최, 범도민 자율참여 바다정화활동, 매월 맞춤형 청소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바다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342회의 범도민 바다정화 활동에 9,032명이 참여하여 642.4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 하였음.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 줄이기 사례

- 프랑스 보르도 市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지속가능발전’ 시정목표 선정
- 해양쓰레기의 80%는 도시의 하수구에서 출발함에 착안한 프로젝트로 도로변·인도 등에 주로 설치된 하수구·배수구 덮개에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설치
- 예산은 총 5천 유로(650만 원)
- ‘바다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다에 아무것도 버리지 마세요.’



[그림] 하수구 덮개에 문구를 설치하는 모습

□ 추진전략

-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별 예방 및 공간별 수거·관리
-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증진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해양투기 사전예방
- 낚시통제구역 확대, 낚시 관리구역제도 도입 등 낚시관리 기준 강화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어업 지원

□ 추진계획

- ①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 해양 침적쓰레기 관리사업 확대
 - 어업폐기물 집하시설(육상·선상) 확충
 - 시민참여 정화활동 활성화
- ② 낚시관리 기준 강화 및 친환경어업 지원
 - 낚시통제구역 확대 지정(낚시 관리구역제도 연계)
 -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확산 및 보급
 - 친환경부표 100% 보급사업
 -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해안쓰레기 수거량 (재해쓰레기 제외)	천톤	9.2	10.1	11.2	12.3	13.5	14.8	16.3	(전년비10%↑)
침적쓰레기 수거면적	ha	1,320	1,330	1,330	1,330	1,330	1,330	1,330	
어업폐기물 집하장 설치 개소수	개소	20	20	20	20	20	20	20	(육상·선상집하장 설치)
바다자율정화 도민참여율 (공무원·어업인 제외한 비율)	%	50	55	60	65	70	75	80	(전년비5%↑, 코로나)
낙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등	개소	26	28	30	32	32	32	32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증 가율	%	20.5	21.7	22.9	24.5	30	30	30	누계
친환경부표 보급율	%	27	43	60	79	80	85	90	누계
생분해성어구 보급률	%	-	-	-	50	50	50	50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해양 자원 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해양 침적쓰레기 관리사업 확대																				
어업폐기물 집하시설(육상 선상) 확충																				
시민참여 정화활동 활성화																				
낙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등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확산 및 보급																				
친환경부표100% 보급사업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50,810,936	51,439,486	48,211,486	48,211,486	48,211,486	
해양폐기물 자원 순환체계 구축	국비		3,725,000	2,483,000				
	도비		1,117,000	745,000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강화 및 시 민참여 활성화	국비		16,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도비		11,000,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11,500,000	
친환경어업 지원	국비		12,500,000	13,000,000	13,000,000	13,000,000	13,000,000	
	도비		6,468,936	6,711,486	6,711,486	6,711,486	6,711,486	

※ 2025년~2027년 2024년 기준 적용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주무부서: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협업부서: 어촌발전과, 환경정책과 위원회: 지역연안관리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해양관광기본계획 남시진흥기본계획 내수면어업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해양환경보존종합대책 해양공간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계획 항만관리, 운영관련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해양레저산업 육성종합계획 섬발전종합개발계획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오염방지 및 유류 오염 사고예방대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습지보전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항기본 및 개발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 어업자원조성계획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해양정책종합계획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 기대효과

- (경제) 해양쓰레기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예방
- (사회)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환경) 기후 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 기여
- (거버넌스) 민관산학연의 속의 공론으로 사회적 수용력 제고

작성자	해양항만과장 (☎211-3910) / 해양관리파트 (☎3922)
	수산정책과장 (☎211-4010) / 양식산업담당(☎4012)
	수산자원과장 (☎211-5260) / 어업관리담당(☎5272), 자원조성담당(☎5282)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17백만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환경정비,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교육 등 도내 습지보호지역(마산 봉암곶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 서식지로 알려진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를 '19년 12월에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년 2월에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보호에 힘쓰고 있음
-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집중화로 인해 악화된 마산만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및 확충, 오염 퇴적물 준설 등 높은 수준의 환경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경상남도는 마산만 해역 수질을 전국 연안 평균 수질과 동일한 해역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04.12.29)]을 수립함.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사전환경관리 체제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함
- 경상남도는 향후 마산만에 위치한 봉암곶별 보전 및 마산만의 생태적 가치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 등과 연계, 마산만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해양수산부에서도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해양생태계 해양생태축 설정 관리, 연안습지보전축,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설립, 멸종위위기 해양생물 증식·복원 등의 전략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중앙부처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에 힘써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줘야 함

추진전략

- 해양 생태축 설정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
-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인식 증진
- 해양보호구역 확대

추진계획

- ①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
 -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 강화
 - 해양보호구역 홍보, 교육 강화
- ② 해양보호구역 확대
 - 해양보호구역(5종) 신규 지정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교육 및 홍보건수	회	2	2	2	2	2	2	2	
해양보호구역 주민교육 참여주민수	백명	-	-	-	50	50	50	50	
해양보호구역 지정수	개소	3	3	3	4	4	4	4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 강화																				
해양보호구역 홍보, 교육 강화																				
해양보호구역(5종) 신규 지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총예산액		314,860	324,310	324,310	324,310	324,310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	국비	279,010	287,380	287,380	287,380	287,380	
	도비	35,850	36,930	36,930	36,930	36,930	

※ 2025년~20207년 2024년 기준 적용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p>중앙부처: 해양수산부 주무부서: 해양항만과 협업부서: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환경정책과 위원회: 경상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지방항만정책심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제2차 연안통합관리 계획 제2차 연안통합관리 계획 변경계획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환경보존종합대책 해양공간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공유수면매립 사업 기본계획 해양쓰레기관리 시행계획 항만관리, 운영 관련 계획 마산만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종합계획 섬발전종합개발계획 환경보전계획 습지보전실천 계획 및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오염방지 및 유류오염사고예방대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습지보전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항기본 및 개발계획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해양정책종합계획

□ 기대효과

- (경제)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 창출
- (사회)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환경)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 기여
- (거버넌스) 해양보호구역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기회확보

작성자	해양항만과장 (☎211-3910) / 해양관리파트 (☎3922)
------------	-------------------------------------

U N 목 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경 남 목 표	15.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의 권리 실현을 위해 힘쓴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습지보호지역 (개소)	6	7	8	12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생태계 서비스 평가지표				

15-1 자연의 권리 실현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 배경 및 필요성

- 자연환경의 경제·문화·학술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후손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기본방향임
 - 경상남도는 생태계가 우수한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음

보전지역 지정현황

명 칭	지정사항(지정일)	지정사유	면적(km ²)
거제시	생태·경관보전지역 ('95.10.2.)	고란초집단 서식지	0.002
창녕군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99.8.9.)	최대규모 자연늪	8.651
양산시 화엄늪	습지보호지역 ('02.2.1.)	산지습지	0.124
양산시 진불산 고산습지	습지보호지역 ('04.2.20.)	산지습지	0.308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습지보호지역 ('06.12.28.)	산지습지	0.587
창원시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11.12.16.)	연안습지	0.1
김해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17.11.23.)	하천습지	1.244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특정도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	총 62개소 창원시(1개소), 통영시(26개소), 거제시(8개소), 사천시(4개소), 고성군(5개소), 남해군(9개소), 하동군(9개소)

출처 : 경상남도 환경백서(2020년)

- 경상남도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79개소, 28,751ha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지역의 야생동물에게 34회 7톤의 먹이를 공급하여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는 등 야생생물 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음
 - 경상남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기후부지정 총 267종으로 97종류에 해당됨, 포유류 20종, 조류63종, 양서·파충류 8종, 어류 27종, 곤충류 26종, 무척추동물 32종, 식물류 88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
- 경상남도는 따오기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2008년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따오기 2마리 기증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인 따오기를 복원함. 2020년까지 434마리를 복원함
- 자연과 인간의 지속적인 공존을 위하여 야생생물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해야 함

□ 추진전략

- 생물종 조사 및 보호와 다양한 활동 전개
- 도내 훼손된 생태축과 습지 등에 대한 생태계 복원
- 민관산학연 협력과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속의
- 자연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 지속

□ 추진계획

① 생물종 조사 및 보호

- 생물종 보호와 조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도내 자연환경조사 확대 및 생태계 훼손지역 지속 복원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

② 시민참여 및 인식 확대

- 생물종 보호 시민캠페인 실시
 - 경상남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과 도민 짝궁 지정
 - e-mail 서명, 명함후면, sns 메신저 프로필 사용 등
 - 공공기관, 시군지속협 등 참여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 개소수	개소	-	-	1	0	1	0	0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건수	건	1	2	1	0	0	0	0	
시민환경과학자 모니터링 건수	건수	-	-	12	12	12	12	12	
거버넌스 운영 횟수	회	-	1	2	4	4	4	4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3				2024				2024				202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건수																				
생물종 보호와 조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660,000	1,660,000	1,660,000	1,660,000	
자연환경 정밀조사	국비	-	-	-	-	-	
	도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생물자원 보전시설	국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도비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 2025년~2027년 2024년 기준 적용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p>중앙부처: 기후부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협업부서: 산림관리과, 해양항만과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분쟁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계획 ▪ 토양보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계획 ▪ 환경교육종합계획 ▪ 토양보전계획 ▪ 습지보전실천계획 및 시행계획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생태관광활성화기본계획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 해양환경보존 종합대책 ▪ 기후변화 적응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계획 ▪ 기후변화적응대책 ▪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 **기대효과**

- (경제)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자연환경보전 일자리 창출
- (사회) 생물다양성보호와 자연과 인간의 공존 사회적 가치 실현
- (환경) 탄소감축과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기여
- (거버넌스) 민관산학연의 숙의공론으로 사회적 수용력 제고

작성자	환경정책과장 (☎211-6610) / 자연보전담당 (☎6632)
------------	-------------------------------------

□ 배경 및 필요성

- 습지는 월등한 생산력과 에너지 순환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생물상이 존재함. 계절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꽃을 피우는 다양한 종류의 수초 및 습지식물, 수서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임.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되는 실정임. 습지의 상실은 습지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 상실을 의미함
-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습지보전을 위해 노력함

- 제1차 경상남도습지보전실천계획(2009~2013년)
- 제2차 경상남도습지보전실천계획(2014~2018년)
- 제3차 경상남도습지보전실천계획(2019~2023년)
 - 정책비전 : 건강한 습지, 행복한 미래
 - 정책목표 : 습지관리 기반조성, CEPA활성화, 지역중심의 현명한 이용
국내외 협력강화

- 경상남도는 서북쪽으로 내륙과 연결되어 있고 동남쪽으로 해양과 접해 있어 해발이 낮아 크고 작은 자연습지가 강의 지류와 본류를 따라 발달하였으며, 태백산맥이 발달한 동부산악지형에 주로 산지 습지, 만조와 건조 때의 해수면 높이의 차가 큰 남해연안지역에 연안습지가 분포하고 있음

경상남도 내 습지분포 현황

(단위:개소)

계	내륙	연안
321(18개 시군)	274(18개 시군)	47(7개 시군)

- 습지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자연 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희귀·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이 서식하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에는 랍사르협약에 등록되어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원시적 자연늪인 창녕 우포늪과 양산 화엄늪, 신불산 고산습지, 밀양 사자평 고산습지, 김해 화포천, 창원 봉암갯벌 등 6개소 11,014km²가 지정·관리되고 있음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지역	시군	면적	특징	지정일
우포늪	창녕군	8.651	우리나라 최고의 원시 자연늪	' 99.8.9. ' 98.3.(랍사르)
화엄늪	양산시	0.124	산지습지	' 02.2.1.
신불산 고산습지	양산시	0.308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습지	' 04.2.20.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밀양시	0.587	이탄층이 발달한 습지, 멸종위기종 삿 등 서식	' 06.12.28.
김해 화포천	김해시	1.244	황새 등 법종보호종이 다수 분포하고, 생물다양성 풍부	' 17.11.23.
봉암 갯벌	창원시	0.1	도심 습지, 희귀·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 11.12.16.

※ 출처 : 경상남도 환경백서(2020년). 재구성.

- 경상남도는 향후 습지 복원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습지보전 정책을 고도화하고 생태계서비스⁵⁾ 가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통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해야 함
 - 특히, 기후위기와 팬데믹시대, 마을 안에서 도시숲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추정하여 시민들의 인식 공감대 형성 필요

5) '자연의 서비스' 라는 말이 1977년 Science 저널에 발표된 W.Westman의 논문¹⁾에 처음 등장하였고, '생태계서비스' 용어는 Ehrlich & Ehrlich(1981)²⁾이 처음 사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는 1980년대 생태학의 한 분야로 시스템 생태학이 발전하고 생태학과 경제학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생태경제학의 연구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생태계서비스 연구를 크게 촉발시킨 것은 Daily(1997)의 저서 '자연의 서비스: 자연생태계에 대한 사회의 의존성' 과 Costanza 등(1997)이 Nature에 발표한 논문 '전 세계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본의 가치' 이다.

□ 추진전략

-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참여 인식증진 및 관리강화
- 그린뉴딜 연계 습지생태계 현황조사
-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자연과의 공존 필요성 형성

□ 추진계획

① 습지보전지역 관리강화

- 습지보전지역 지정
- 람사르습지 등록
- 습지생태계 현황조사

② 생태계서비스 확대

- 도내 습지대상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방안 마련
-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도민 인식증진 교육
-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시군 적용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습지보전지역 지정수	개	6	6	7	7	7	7	7	
생태계서비스 인식증진 교육 건수	건	-	-	5	10	15	20	25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습지보전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습지생태계 현황조사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방안 마련																				
생태계서비스 인식증진 교육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개발 및 시군 적용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973,000	2,883,000	2,883,000	2,883,000	2,883,000	
습지보전지역 관리 강화	국비		1,608,000	2,308,000	2,308,000	2,308,000	2,308,000	
	도비		235,000	325,000	325,000	325,000	325,000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방안 마련	국비		-	-	-	-	-	
	도비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생태계서비스 인식 증진 교육	국비		-	-	-	-	-	
	도비		3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2025년~2027년 2024년 기준 적용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기후부 ▪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 협업부서: 산림관리과, 해양항만과, 수자원과, 어촌발전과 ▪ 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분쟁위원회, 환경영양평가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환경보전계획 ▪ 토양보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계획 ▪ 환경교육종합계획 ▪ 토양보전계획 ▪ 습지보전실천계획 및 시행계획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생태관광활성화기본계획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 해양환경보존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자연환경보존, 야생생물보호 정책 시행계획 추진 ▪ 시군 세부시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자연환경보전 일자리 창출
- (사회)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연과 인간의 공존 사회적 가치 실현
- (환경) 탄소 감축과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기여
- (거버넌스) 민관산학연의 숙의공론으로 사회적 수용력 제고

작성자	환경정책과장 (☎211-6610) / 자연보전담당 (☎6632)
------------	-------------------------------------

U N 목 표	16. 인권·정의·평화				
경 남 목 표	16. 거버넌스 기반으로 행정계획과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대상 수개	0	10	40	80
시군증진지표	시군별 지속가능발전 지원조례				

16-1 행정계획과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남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야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지속가능발전 내용에 기반하여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및 조례 제·개정을 하여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운영 원리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함
 -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경남의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 행정계획과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시행함
- 지속가능성 검토는 사후 ‘평가’의 의미보다는 사전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임
 -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획(예, 양성평등정책종합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환경보전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
 - 또한, 지속가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지역내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되는 예비타당성평가,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며, 지속가능성

- 평가는 경제, 사회, 환경, 제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 특히 경상남도가 수립하는 각종 중장기 행정계획이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추진전략**

- 경남형 지속가능발전 검토 가이드라인 구축 및 시군 확산
-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내실화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검토 및 정합성 제고

□ **추진계획**

- ①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행정계획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 추진계획 마련
 -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 및 절차 마련
 -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
- ②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추진계획 마련
 -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 및 절차 마련
 -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건수	건	-	-	-	5	10	15	20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건수	건	-	-	-	5	10	15	20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행정계획 및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조례의 지속가능성 검토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9,000	21,000	10,000	20,000	20,000	
조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국비		-	-	-	-	-	
	도비		9,000	15,000	-	-	-	
조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	국비		-	3,000	5,000	10,000	10,000	
	도비		-	3,000	5,000	10,000	10,000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국무조정실 주무부서: 인구정책담당관 협업기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SDGs 유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 기대효과

- (경제) 지속가능성 검토 강화에 따른 예산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 지속가능발전 운영 원리의 지역사회 내재화
- (환경) 지속가능성 검토에 의한 친환경 정책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 기여
- (거버넌스) 민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작성자

인구정책담당관 (☎211-2210) / 지역활력파트 (☎2232)

□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수립, 추진, 평가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함. 특히, 경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메타거버넌스를 통해 각 영역과 분야의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야함
- 이에 지속가능성 제고를 돕는 각종 위원회활동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 및 시군 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위원회 활동 활성화로 혁신을 꾀해야함
 - 경상남도의 도정위원회는 2021년 12월말 기준 총221개이며, 총 3,971명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음
 - 각 도정위원회와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남SDGs와의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추진전략

- 위원회간 협력 활성화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 각종 위원회 활동에 SDGs 전략적 매칭
- 분야별 교류와 숙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

- ① SDGs 관련 위원회 협력 활성화
 - 합동 연찬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SDGs 관련 위원회 합동 연찬회 개최
 - 분야별 위원회간 간담회 개최
 - 위원회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분야 매칭
 - 지속위 분과와 각종 위원회간 분야이슈별 간담회 개최
(ex. 지속가능성평가, 목표치 설정 등)

② SDGs 관련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 제공

- 검토 항목, 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공 및 설명 등

○ 관련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지원

- 지속가능발전 관련 숙의공론화장 참여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동 연찬회 개최 건수	건	-	20	20	20	20	20	20	
분야별 위원회간 간담회 개최 건수	건	-	1	1	1	1	1	1	
지속가능성검토 가이드라인 제공 위원회수	개	-	7	7	7	7	7	7	
위원회 역량강화 지원 건수	건	-	1	1	1	1	1	1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합동 연찬회 개최																				
분야별 위원회간 간담회 개최																				
지속가능성 검토 가이드라인 제공																				
관련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비고
		2023	2024	2025	2026	2027	
총예산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SDGs관련 위원회 협력 활성화	국비	-	-	-	-	-	
	도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SDGs관련 지속가능발 전 역량강화	국비	-	-	-	-	-	
	도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국무조정실 주무부서: 인구정책담당관 협업기관: 경상남도 지 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경상남도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SDGs 유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 획

□ 기대효과

- (경제) 재정 운용 및 도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 (사회) 혁신적 위원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지속가능성 증진
- (환경) 지속가능성 검토에 의한 친환경 정책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 기여
- (거버넌스)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작성자	인구정책담당관 (☎211-2210) / 지역활력파트 (☎2232)
------------	--------------------------------------

U N 목 표	17. 파트너십				
경 남 목 표	17. 민관숙의를 통해 시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평가를 지원한다				
경남목표지표	연도	2020	2025	2030	204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도%	0	25	50	100
시군증진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 및 평가 지원 예산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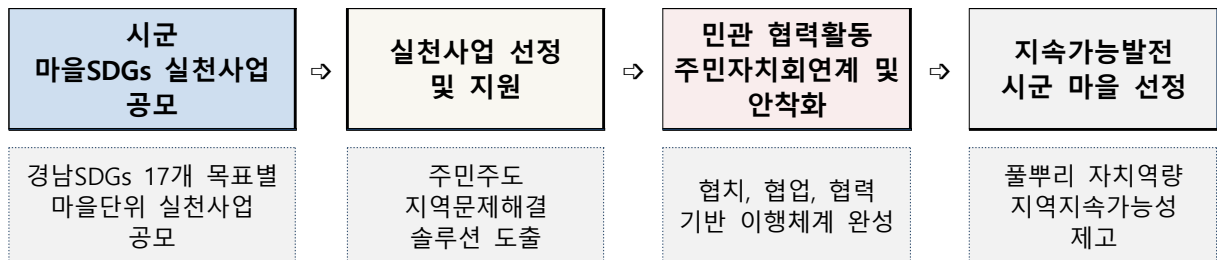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2015년 유엔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며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UN SDGs를 반영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전 분야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018년 12월일(3차 변경계획), 2020년 12월(4차 계획)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함
- 경상남도는 2016년 11월 경상남도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의 정책추진에 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기구인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남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소통과 민·관 협력을 목적으로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18개 시군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담당 공무원과 민간단체 대표, 전담위원 등 39명으로 구성된 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18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추진에 더욱 노력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 지방화를 위한 시군원탁회의’등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경남도-시군간 상시 지속

가능발전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

-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군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사례, 노하우, 빅데이터 등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함
- 경상남도는 UN 합의사항 이행을 제도화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수립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향후 20년간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함
- 그동안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노력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사회혁신 분야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군별 마을 단위로 더욱 촘촘한 거버넌스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의 실질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을자치 역량강화
 - 지속가능발전 실천마을을 확산시키고 이를 추진하면서 확산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마을 지정 검토
 - 주민주도형 지속가능발전사업 운영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모색



□ **추진전략**

- 도-시군 간 지속가능발전 추진 협력체계 강화
- 공무원, 지속협간 교류회 및 지속가능발전 지식, 정보 공유
- 협치·협업·협력 기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완성
- 17개 목표별 그린뉴딜과 연계 지속가능발전 모델사업화

□ **추진계획**

- ① 경남도-시군 간 상시 지속가능발전협력 체계 구축
- 시군 지속가능발전 지식플랫폼 운영
 - 지속가능발전정책사례, 업무추진 노하우, 빅데이터 등

○ 시군 지속가능발전업무 실무자 간담회 실시

② 마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천 확산 지원사업

○ 마을 단위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공모

○ 지속가능발전마을 지정 및 홍보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지식 플랫폼 이용자수	명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간담회 참여 시군수	개	18	18	18	18	18	18	18	
지속가능발전 실천 마을 수	개	-	3 (시범)	10	20	30	40	50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군 지식플랫폼 운영																				
시군 지속가능발전업무 간담회 실시																				
마을 단위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공모																				
지속가능발전마을 지정 및 홍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7,000	32,000	32,000	32,000	32,000	
경남도-시군간 상시 지속가능발전협력체계 구축	국비							
	도비		2,000	2,000	2,000	2,000	2,000	
마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확산 지원사업	국비							
	도비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국무조정실 주무부서: 인구정책담당관 협업부서: 전부서 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민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 ▪ 그린뉴딜종합계획 외 중장기행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그린뉴딜계획외 중장기행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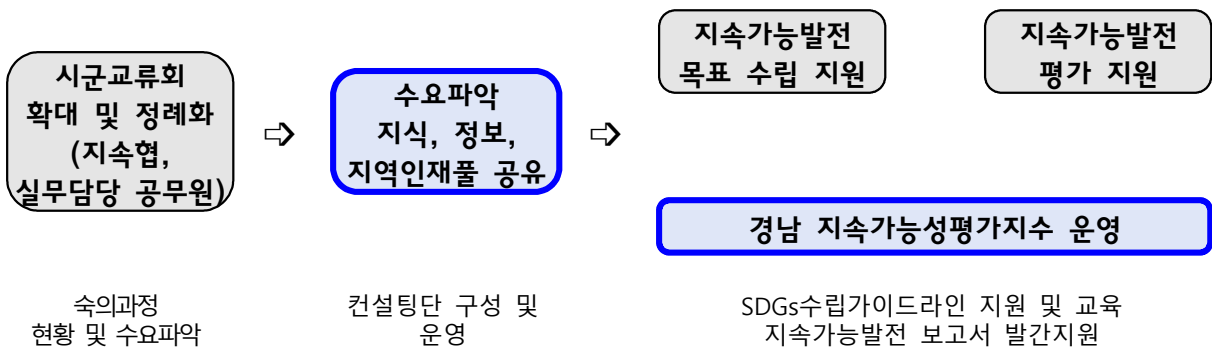
□ **기대효과**

- (경제) 도-시군간 지식, 정보교류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 (사회) 주민주도 지역문제해결로 풀뿌리자치 역량강화
- (환경)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마을 조성
- (거버넌스) 도-시군 간 협치·협업·협력 기반 지속가능발전 이행 체계 완성 및 목표 달성

작성자	인구정책담당관 (☎211-2210) / 지역활력파트 (☎2232)
------------	--------------------------------------

□ 배경 및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염병은 기후위기로 인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근본적인 대안으로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이 절실함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인류 보편적 발전전략으로 2015년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확정된 이래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음
- 경상남도는 그간 지역발전 및 도정 계획이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각 정책 분야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선도적인 시군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 아울러 경상남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방화를 위한 시군원탁회의’ 실시와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향후 경남도-시군간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을 연계와 정책 정합성을 위해서 이러한 도-시군간 속의과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함

- 경남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 및 평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경남도-시군 간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을 통한 지원 수요파악
- 경남도-시군 간 지속가능발전 지식, 정보, 인재풀 기반 컨설팅 지원
-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연계 지속가능성 평가지수 운영
- 시군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

□ 추진계획

- ① 시군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지원
 - 경남 시군 SDGs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경남 시군 대상별 교육 지원(공무원, 지속위위원, 시민, 학생 등)
 - 경남 지속가능발전 컨설팅단 운영 및 지원
- ②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원
 -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원(평가지표 풀, 현황데이터 등)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지원(가이드라인 등)
 - 경남 지속가능성 평가지수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시군 교육 횟수	회	3	3	3	3	3	3	3	
컨설팅지원 횟수	회	-	3	3	3	3	3	3	
보고서 발간 여부	여부	-	-	-	-	1	-	1	
시군 평가 정보제공 지원(건수)	건	-	-	2	2	2	2	2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연도/분기)	2023				2024				2025				2026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지원																				
경남 지속가능발전 컨설팅단 운영 및 지원																				
경남 지속가능성평가지수 운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평가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과제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총예산액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시군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평가 지원	국비		-	-	-	-	-	
	도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 협력주체 및 연관계획

추진 및 협력 주체	국정 연관계획	도내 연관계획	시군 연관계획
중앙부처: 국무조정실 주무부서: 인구정책담당관 협업부서: 전부서 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그린뉴딜종합계획 외 중 장기행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그린뉴딜계획외 중 장기행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기대효과

- (경제) 그린뉴딜, 대안경제 활성화, 지역상생으로 경제발전
-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정·통합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환경) 기후위기 대응으로 탄소중립, 환경보전 기여
- (거버넌스) 경남도-시군 간 협치, 협력,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완성 및 목표 달성 실질화

작성자

인구정책담당관 (☎211-2210) / 지역활력파트 (☎2232)